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1920-30년대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
세력에 관한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백 주 영

1920-30년대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
세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안도경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백주영

백주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원장 _____ 강원택 (인)

부위원장 _____ 안도경 (인)

위원 _____ 박원호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제시기 규명의 일환으로 1920-3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던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세력의 행위자 분석을 시도했다. 전조선 인구의 8할 정도가 농업인구였기 때문에 일제시기 규명에 있어 농업정책 분석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농업정책의 최종목표가 일본 본토로의 안정적인 저가의 쌀 공급이었다는 점에서 선미(鮮米)의 이출(移出)을 살펴보고, 선미이출에 관한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포착함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구체적·실제적인 인물들을 드러내는 일은 일제시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그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선미옹호를 위해 조직되거나 적극 참여하였던 주요 단체 7개에 속한 주요 인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리하였을 때, 인물의 대다수는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인이었고, 약 20% 정도의 조선인마저도 일본 제국의 부역자들로 파악되었다. 또한, 미곡관련 이슈인 만큼 지주이거나 정미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상인, 관료 그룹의 사람도 다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내부적인 특성과 발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했다. 직접생산자인 조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조선 언론 기사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선 농민의 관점에서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대안들은 선미이출 혹은 선미이출입제한의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 이상 농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선미옹호운동세력에 자소작으로 살아가는 보통의 조선 농민들의 참여가 전무한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이 제시한 월

별이출제나 미곡창고의 실시는 사실상 조선 농민의 실생활과는 괴리된 정책이었고, 대지주나 미곡상 이상의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그 중에서도 재조일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도움이 될 뿐이었다.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며 모국의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선미옹호운동세력은 경제보다는 정치의 영역의 행위자로 파악되기 쉽지만,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성격이었다.

주요어 : 선미옹호운동, 재조일본인, 선미이출, 행위자 분석, 미곡수출, 미곡수탈

학 번 : 2015-20122

목 차

I. 서론	1
1. 들어가며	1
2.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배경	2
3. 기존 연구의 비판적 분석	4
4.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6
II. 선미이출과 선미옹호운동	9
1. 선미이출의 흐름과 배경	9
2. 선미이출입제한의 움직임과 선미옹호운동	12
3. 재조일본인세력과 일본 본국	17
1) 일본 본국과 재조일본인세력의 관계	17
2)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논리적 근거	20
III. 선미옹호운동 관련 단체 및 주요 인물 분석	24
1. 분석의 개요	24
2. 선미옹호기성회	25
3. 조선농회	26
4.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27
5. 상업창고,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28
6. 조선상공회의소	30
7. 조선취인소연합회	31
8. 소결	32
IV. 조선농민과 선미옹호운동	37

1. 분석의 개요	37
2. 정책 내용에 대한 비판	39
3. 조직 구성에 대한 비판	44
V. 결론	50
참고문헌	52
부록	56
Abstract	101

표 목 차

[표 1] 5개년 평균으로 본 조선미의 생산량과 수이출량 및 소비량 추이	11
[표 2] 조선미의 생산량에 대한 이출량 비율	11
[표 3] 미곡, 선미이출 관련 주요 사건 및 일본 본국 측의 움직임	15
[표 4]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선미이출제한반대운동	15
[표 5] 선미옹호운동단체 민족별, 직종별 통계	33
[표 6] 선미옹호운동단체 결임 상황	33
[표 7] 선미옹호기성회 발기인 신상 (1)	56
[표 8] 선미옹호기성회 발기인 신상 (2)	58
[표 9] 조선농회 임역원 및 주요인물 개인 신상 (1)	61
[표 10] 조선농회 임역원 및 주요인물 개인 신상 (2)	64
[표 11] 조선곡물상연합회 임역원 개인 신상 (1)	68
[표 12] 조선곡물상연합회 임역원 개인 신상 (2)	69
[표 13] 상업창고 발기인 신상 (1)	71
[표 14] 상업창고 발기인 신상 (2)	73
[표 15] 조선미곡창고 발기인 신상 (1)	76
[표 16] 조선미곡창고 발기인 신상 (2)	78
[표 17] 조선상공회의소 주요 인물 신상 (1)	81
[표 18] 조선상공회의소 주요 인물 신상 (2)	86
[표 19] 각 지역 취인소 주요 인물 (1)	92
[표 20] 각 지역 취인소 주요 인물 (2)	96
[표 21] 각 지역 취인소 주요 인물 (3)	99

그림 목 차

[그림 1] 재조선일본인의 정치과정	15
[그림 2] 선미이출입 관련 조선 내부 주요 행위자	35

I. 서론

1. 들어가며

최근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한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로 발돋움을 하고자 하는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가득하다. 이는 한 세대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들이 분출되는 중에 있는 것이다. 걸어온 길과 걸어야 할 길을 둘러보는 대한민국에서 깊은 탐구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일제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시기가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굉장했다고 표현하기에도 모자랄 만큼 뿌리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3일 JTBC ‘밤샘토론’에서 일제시기의 쌀 이출(移出)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 또한 대한민국이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과제가 수면 위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 저자, 전 한국현대사학회장, 전해군제2사관학교 한국사 교관)는 일본으로의 조선 쌀 이출은 돈이 지불되었다는 의미에서 엄연히 수출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이 불리했던 교환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조선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수탈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나 성균관대 이신철 연구교수는 쌀 부족을 겪고 있는 식민지라는 조선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돈 문제만으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¹⁾

이 토론내용은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일제시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처 정리되지 않은 학문적, 정서적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일제시기 연구는 최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이분법적 프레임 넘어서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연구들

1) 김원철. “권희영 “수출과 수탈이 무슨 차이인가” (2015.10.15.) <한겨레>

이 진영논리나 감정에 치우쳐온 것 또한 사실이다. 혹은 일제시기에 관한 많은 수의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주제들도 더러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일제 강점 백주년이 되어 가는 이제는 보다 냉철하면서도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제시기에 대한 연구, 즉 일제시기를 규명하는 일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단번에 정의내리는 것보다는 사르토리의 추상화의 사다리(the ladder of abstraction)와 같이 점차로 층위를 낮추어 구체적인 질문과 답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제시기는 과연 어떠한 시대였는지, 즉 그 본질은 무엇이었는지에 답하기 위해서 하위 영역의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사다리의 꼭대기에 ‘일제시기 규명’이라는 대질문(大質問)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점차로 사다리를 내려오면서 당시의 미곡정책(米穀政策)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선미(鮮米: 조선에서 생산된 쌀)이출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된다.

물론 미곡정책 이외에 밝혀져야 할 많은 분야들이 있음에도 일제시기 규명을 위한 사다리에서 미곡정책과 선미이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조선인의 80%가 농민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미곡정책이야말로 조선인 지배를 관통하는 주요 정책이었으리라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일제시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정책이다. 또한 그만큼 결정적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TV 토론에서와 같이 여전히 화제가 되고 대립각이 첨예하게 세워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미이출을 분석하는 일, 좀 더 광범위하게는 일제시기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에 대한 정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현재 대한민국이 서 있게 된 배경을 탐색하는 자리가 된다.

2.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배경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할이나 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높아진 미곡단작화 경향으로 인해 조선농가 수입의 약 70%가

쌀농사로 발생하였으며 쌀의 판매시장은 주로 일본 본토였다는 점은(김선미 1994, 494 오승용 2011, 21에서 재인용) 미곡정책에 대한 연구가 경제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제시기 규명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일제시기 미곡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제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다소간의 협소함과 천편일률적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미곡정책 연구는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이나 1930년대 중후반부터의 국가총동원령으로서 미곡공출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제의 조선 농업정책의 주된 목적이었던 선미이출과 같은 것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에서 생산된 쌀의 이출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이출액이 총 무역액의 절반에 해당했으며(김제정 2009, 77-78) 특히 일제강점 이후 조선의 미곡 수이출시장은 일본으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에(송규진 2002, 141) 식민지 조선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으로의 미곡정책 연구, 그 중에서도 선미이출의 문제는 조명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선미이출 이슈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선미이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환으로서 1920-30년대의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 분석을 목표로 한다. 선미옹호운동은 개항기부터 시작된 제법 긴 선미이출의 역사 속에서 일본 정부의 선미이출입제한 시도에 맞서 재조(在朝)중인 관련 행위자들의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일컫는다. 선미이출의 동학 속에서 선미옹호운동은 선미이출입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일련의 행위였다. 심지어 경제정책으로 일본 본국의 정부와 대립한 전례가 없었던 조선총독부마저도 선미옹호에 적극 동참하였던 만큼(김제정 2009, 80) 선미옹호운동은 선미이출 정책적 기조의 변화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선미이출의 성격을 탐색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미이출 및 선미옹호운동은 몇 편의 연구 외에는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주제로 남아있다. 또한 최근 재조일본인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력을 얻고 있음에도 재조일본인이 주요 행위자라고 여겨지는 선미옹호운동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선미옹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전강수(1993)의 박사논

문이다. 전강수는 1930-45년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미곡정책 전반을 분석하며 선미이출과 선미옹호운동을 다루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조선측에서 발의된 법안들, 대책안들을 소개하는 등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는 일본 지주의 선미이입제한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선미대책이 근본적인 통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적 통제에 머물렀음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선미옹호운동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강수는 이 결과를 선미옹호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로만 여길 수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선미옹호운동은 식민지조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조선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일어난 특별한 움직임이었음을 일관되게 말했다.

이후 기유정(2009)은 일본 본국 정부의 조선미이입통제정책에 대응한 선미옹호운동 과정 전반을 다루며 선미옹호운동 세력 주장의 핵심은 통제정책 그 자체보다는 내지와 외지에 차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일본 본국과 선미옹호운동 세력의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했으나 결국 정치갈등으로 수렴하였고, 본국의 일국가주의, 경제현실주의에 대항한 선미옹호운동 세력의 제국론, 정치적 도덕주의가 우위를 점하며 조선미이입통제 이슈에서 선미옹호운동 세력의 주장이 관철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오승용(2011)은 미곡정책을 국가자율성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했는데, 선미이출입제한과 선미옹호 문제에 있어서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일본이라는 국가의 도구적, 구조적인 자율성이 모두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주세력의 이해가 반영되기도 했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3. 기존 연구의 비판적 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선미옹호운동 발굴과 연구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이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는 선미옹호운동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생

략된 채 입장 설명에만 그친 측면이 크다. 예를 들어 선미옹호운동세력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당시 선미옹호기성회와 그 구성원을 민족 계급적으로 살펴보면 그 절대다수는 재조선일본인 미곡 관련 상업부르주아지로 여기에 소수이긴 하나 조선인 미곡상과 유력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유정 2011 c, 176)

“... 일본에서 조선미의 이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총독부를 비롯하여 지주, 미곡상인 등의 경제계, 각종 언론 등이 민족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반대운동에 나섰다. ... 식민지 지주들은 조선 내에서의 적극적인 미곡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제정 2009, 78)

“즉 일본의 지주(농촌)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총독부(척무성)·조선인·일본인을 모두 포함하는 조선 측이 대립하는 구도였다.” (김제정 2009, 88)

“그런데 미곡의 이출을 촉진하는 무역업자란 전적으로 일본인이라는 것, 그들은 대개 대지지주이면서 동시에 대정미업자이기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규진 2002, 151)

발췌한 부분처럼 선행 연구는 ‘재조선일본인 미곡 관련 상업부르주아지’, ‘조선 미곡관계자’, ‘조선 측’, ‘무역업자’ 등의 단어로 선미이출 관련 재조선일본인 및 조선인 그룹의 경제적 입장이나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그들은 누구였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선미옹호운동세력 구성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생략된 채로 선미옹호운동의 주체집단이 “재조선일본인 미곡 관련 상업부르주아지”로 규정되며 이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이 틀린 명제는 아니다. 그러나 선미옹호운동세력은 곧 선미이출과 관련된 조선 내 몇몇 이익단체들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유형(有形)의 인물들을 관찰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주로 ‘재조일본인세력 對 일본 본국 정부’의 프레임으로 다뤄졌다. 이 프레임은 곧 ‘(조선 거주) 일본인 對 (일본 거주) 일본인’의 갈등상황이므로 조선과 일본의 민족적 대립이라는 단순한 관점을 넘어섰다는 의의가 있다. 다른 말로하면, 일제시기가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선미옹호운동세력이 재조(在朝) 행위자라는 사실, 따라서 조선 내지는 한반도 내부의 관점에서 이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했다. 그동안의 평면적이고 단순화되었던 일제시기 연구를 입체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의 중간과정에 머물러있는 듯한 인상을 지니는 선미옹호운동연구는 이제 선미옹호운동과 일제시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4.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선미옹호운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선미옹호운동 참여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을 수행하고 당시 조선 언론을 통하여 선미옹호운동세력에 대한 외부자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선미옹호운동 참여 행위자 분석을 위해 전강수(1993)의 글에서 언급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단체 목록을 추려보면 선미옹호운동 관련 <동아일보> 기사에 나타난 단체들과 거의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선미옹호운동 관련 단체는 선미옹호기성회, 조선농회,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상업창고, 조선미곡창고, 조선상공회의소, 취인소연합회, 이상의 7개다. 이후 신문 기사를 통해 각 단체들의 주요 인물들, 즉 임직원이나 창립발기인 등의 명단을 구성하고, 일제시기 재조일본인 명사들을 소개해놓은 『조선공로자명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들의 약력을 표로 정리한다. 개인들의 이력이 담

긴 1차 자료들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온라인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선미옹호운동에 참여한 개인들의 민족구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성격 규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그룹의 내부적인 특성이나 참여자들의 발화로만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으로도 선미옹호운동세력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연구들의 논의는 선미옹호운동에 있어 일본 본국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내부의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이 타당하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미이출입 및 선미옹호운동 관련 조선 내부 행위자들, 특히 조선 농민들이 선미옹호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착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선미옹호운동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미옹호운동 관련 단체들처럼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 혹은 농민만을 위한 그룹이 좀처럼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정 단체 위주의 분석이 아닌, 조선인 발행의 신문 및 잡지(<삼천리>, <동광>, <별건곤> 등)상에 나타난 선미옹호운동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입장의 정리와 분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방식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때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주요 구성원들은 대체로 민족적으로는 일본인, 경제·사회적 계층으로는 은행가, 대농장주·지주, 미곡상, 관료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적 정체성은 조선(한반도)이었으므로 일본 본국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조선인들과도 운명을 같이하지는 않는 제3의 세력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선미이출입은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조선과 일본 간의 경제적 교류였지만, 실질적인 행위자들과 그들이 내세운 논리나 입장으로 보아서는 일본인 대 일본인의 경제활동이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선미이출입의 제한이나 지속 역시 조선인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경제활동이었다는 지점에 도달하고, 결론적으로 조선에서의 미곡정책의 핵심목표인 선미이출의 성격을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선미이출과 선미옹호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 및

배경을 알아본다. 선미이출의 역사, 선미이출입제한의 움직임과 그로 인해 촉발된 선미옹호운동을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한 사건들 위주로 보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뤄진 재조일본인세력과 일본 본국의 관계 또한 정리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선미옹호운동 관련 단체들과 각 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분석한다. 개인들의 명단 및 이력이 정리된 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록에 실었다. IV장은 조선인 발행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 선미옹호운동세력과 조선의 행위자들, 특히 조선 농민(직접생산자)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V장의 결론으로 마치게 된다.

II. 선미이출과 선미옹호운동

1. 선미이출의 흐름과 배경

일본으로의 조선미(朝鮮米) 수출은 189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급속한 공업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일본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었다. 강제병합 이후로 일본은 일본자본주의를 지탱해 줄 저임금정책을 위해 더욱 본격적으로 값싼 조선미의 이입(移入)을 장려하고 추진하였다. 일본 내부에서의 쌀 생산량이 정체되거나 퇴보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쌀 수요량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미 이입은 일본 경제 지탱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 조선미에 대한 일본 정부에 대한 관심은 일본으로의 안정적인 수이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호성(2013)은 일제 강점기의 미곡시장을 1)1910~1938년까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기와 2)1939~1945년의 전시 통제경제 시기로 나누었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주지하다시피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일본 제국이 본격적인 전시체제, 총동원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정치, 사회, 경제면에 있어 일상적이지 않은 체제로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구분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미곡시장이 작동했던 때이다.

당시 조선미는 도정이 필요한 한백미로 유통되고 있었으나 일본에서 소비되는 쌀은 모두 도정을 마친 쌀이었다. 따라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조선미는 원래 도정 전의 상태로 선박에 실어졌는데 이동 도중 부패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조선에서 도정을 마친 후에 수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내 일본인 거류자가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일본인이 운영하는 대형 정미소들의 생성을 초래했다. 정미소는 단순

히 정미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미곡 수출, 이출의 유통경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이다. 정미소와 미곡상을 겸영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표 1]은 조선미의 이출량 급증을 나타내는 표이다. 당시 생산량의 증가보다 이출량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2]는 조선미의 생산량에 대한 이출량 비율을 보여주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출량이 급증하고 1930년대 초에는 50%를 초과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

특히 선미이출입제한의 논의와 선미옹호운동이 가장 격하게 충돌하였던 1929년부터 1936년 사이 동안 조선미의 생산량에 대한 이출량 비율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26-1930년, 1931-1935년의 기간 동안의 조선미 총 소비량의 수치가 여섯 번의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총 소비량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면 해당 기간 중 선미이출입제한 논의가 무색할 만큼 일본으로의 조선미 이출이 활발했다고 짐작된다.

2) 오호성(2013, 206-233)은 조선미의 이출량 증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은 다음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공급측면: 화폐경제의 침투, 토지점병의 진전과 소작농의 증가, 고리대와 농가부채의 증가 및 궁박판매, 품종개량, 경종법의 개선과 조선산미증식계획. ②수요측면: 일본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조선미의 이출세와 일본의 조선미 수입세 철폐, 미곡취인소의 조선미 수도대용과 조선과 일본시장의 연결, 일본의 쌀 폭동과 미곡자급정책으로의 전환. ③유통측면: 철도, 해운업의 발달과 미곡의 연계수송, 조선미의 품질개선과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 정미업자의 유통망 장악과 유통의 규모화, 금융, 보험, 창고업의 유통 지원, 미곡수 이출업의 경쟁체제, 조선미의 마케팅과 수요개발.

[표 1] 5개년 평균으로 본 조선미의 생산량과 수이출량 및 소비량 추이³⁾
(단위: 천 석)

기간	생산량	수이출량	수이출량비율(%)	총소비량
1912-1915	12,168(100)	1,181(100)	9.7	11,129
1916-1920	13,698(113)	2,154(182)	15.7	11,591
1921-1925	14,523(119)	3,942(234)	27.1	10,911
1926-1930	14,917(123)	6,021(410)	40.4	9,390
1931-1935	17,261(142)	8,515(621)	49.3	8,836
1936-1939	22,057(181)	8,651(633)	39.2	13,629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1912-1915년의 평균값을 100으로 한 지수

[표 2] 조선미의 생산량에 대한 이출량 비율⁴⁾

연도	이출량(%)	연도	이출량(%)
1912	2.52	1926	36.85
1913	3.61	1927	40.43
1914	9.08	1928	42.81
1915	14.57	1929	41.51
1916	11.2	1930	39.6
1917	9.31	1931	43.84
1918	14.46	1932	47.69
1919	18.8	1933	48.77
1920	13.76	1934	51.81
1921	20.7	1935	52.98
1922	23.15	1936	52.9
1923	24.14	1937	36.86
1924	31.12	1938	39.94
1925	34.95		

3) 오호성(2013, 192)

4) 오호성(2013, 196)

2. 선미이출입제한의 움직임과 선미옹호운동

선미이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1927년의 소화 금융공황과 1929년 세계 대공황, 그리고 일본과 조선의 풍작으로 인한 대대적인 미가폭락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되었다. 일본의 지주들은 1927년부터 이미 ‘제국농회’와 ‘도부현농회장협의회’를 통해서 외국미 수입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는데, 주요 제안은 내지미의 보호를 위해 조선 및 대만에 국립창고를 건설하거나 내지미의 보호를 위해 조선과 대만에도 ‘미곡법’⁵⁾을 내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이었다. 전강수(1993)는 1929년 초반까지 일본 지주들의 이와 같은 제안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평가하며, 1929년 5월의 내각 직속 자문기구인 ‘임시미곡조사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지주들과 식민지세력의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일본 지주들은 주로 식민지로부터 오는 이입미를 전매해줄 것, 즉 ‘외지미전매안’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맞서 식민지세력에서도 이입제한론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미곡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 특이 현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미의 이입을 근본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곡조사회에서는 8개의 대책안이 제안되어 고려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대책안은 ‘이입허가제와 농업창고의 설립을 병행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조선에서 ‘조선미이입제한반대동맹회’의 강한 반대와 조선총독부의 반대의견 제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던 일본 정부로 인하여서 이입허가제, 즉 사실상의 법률적 통제 대신 조선미의 월별평균이출을 조선총독부의 자율로 맡기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수정은 일본 지주와 식민지의 선미옹호세력 간의 대립에서 후자가 승리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전강수(1993)는 그러나 이것이 선미

5) 미곡법의 1차 개정의 내용은 1) 미곡법 제1조 “정부는 미곡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미곡의 매입, 매도, 교환, 가공 또는 저장을 할 수 있다”에 ‘시가조절’ 항목을 추가하였다는 것과, 2) 미곡법 제2조 “정부는 미곡의 수량 또는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칙령으로 기간을 정하여 미곡의 수입세를 증감, 면제 또는 수입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외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었다. 이는 미가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오호성 2013, 290)

용호세력의 일방적 승리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선미용호세력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던 식민지미 수매를 통한 미가안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1931년 말까지 선미이출에 관한 문제는 일시적 소강상태에 처한다. 다만 제국농회 등의 각종 회의에서 일본 지주들의 제안이 꾸준히 있었는데 대체로 식민지미의 평균이출대책을 철저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주장에 그치곤 했다.

그러나 1932년에 농업공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정부를 향한 일본 지주들의 미곡통제 강화 요구도 거세어졌다. 일본 정부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932년 6월, 농림성 내에 미곡과를 확장하여 미곡부를 설치, 7월에는 미곡부 내에 ‘고문회의’를 설치하는 등 미곡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조선에서도 본격적인 선미용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선미용호운동의 기점이 되는 사건은 1932년 7월의 ‘선미용호기성회’의 조직이다. 선미용호기성회를 필두로 선미이출관계자들의 선미용호운동이 퍼져나갔는데 이는 전조선적으로 각 방면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던, 식민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련의 사건들이었다(전강수 1993, 40).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에서 각계의 유력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조선미 통제 정책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서는 조선미 이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선미에 관세를 과하든지 월별로 법률로 이입을 제한하든지 최고 이입액을 제한하여야 되겠다는 설이 있었으므로 조선 측에서는 그 완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농창상창(農倉商倉)을 설립하여 경제작용으로 대일이출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했지마는 최근 일본 농촌의 궁핍이 더욱 심해가매 그 대책의 일종으로 조선미 이입을 단통한 경제문제로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생각하게 되어 경제작용 외의 강대한 힘으로 조선미를 압박하는 설이 농림성을 비롯하여 일본적 여론으로 대두하였으므로 조선미곡관계업자를 비롯하여 재계관계자며 총독부에서까지 여론과 같이 극단의 조선미이입제한은 조선의 사활문제라고 하여 13일 오

후3시부터 총독부에 정무총무, 식산국장 외 유력한 인사 13명이 모여 대책을 협의한 결과 순민간기관으로 조선미옹호기성회를 조직하고 총독부를 편달하는 한편으로 조선미옹호에 활동하게 되었다.”⁶⁾

이후 1932년 7월과 8월에 걸쳐서는 미곡법의 3차 개정이 있었다. 선미이출량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출량의 월별평균안을 채택하자는 조선총독부 척무성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일본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1933년 3월 ‘미곡통제법’이 중의원과 귀족원에서 가결, 공포되었다. 미곡통제법의 주요 내용은 미곡의 이출입을 정부, 즉 일본의 농림성이나 조선총독부가 독점한다는 것이었다. 미곡통제법에서는 이출입 총량의 제한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고려되었지만, 이출의 계절적 조절을 위한 계절수매 외에는 식민지내 국가의 시장개입에 의한 미가유지정책의 실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음을 보여준다. 미곡통제법 공포 이후 1933년 8월까지 미곡문제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또 다시 풍년으로 인해 미곡과잉상태가 예상되면서 일본에서는 미곡통제법의 결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9월 농림성 미곡부는 ‘임시미곡작부반별감소안’을 마련하여, 조선미 생산의 제한에까지 관여할 의지를 보였지만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되었다. 뒤이어 1934년 초 일본 의회는 ‘외지미이입관리안’을 제시했는데, 다시 한 번 미곡통제법의 결함을 지적하며 조선과 대만에서 현지 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수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즉 식민지미이출입의 총량제한을 제안했다. 이 안이 제시되었던 시점에는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듯했으나, 식민지에서 선미옹호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일본 정부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이후 일본 지주들이 외지미이입관리안과 비슷한 내용의 ‘외지미이입상면허제도’(농림성 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한도의 시가에 의한 식민지미 수매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미곡이입조절법안’(척무성 案)이 입안되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승리라 할 수 있다.

6) <동아일보>, “조선미 제한 대책을 강구키로.” (1932.07.15.) 이탤릭체 추가

[표 3] 미곡·선미이출 관련 주요 사건 및 일본 본국 측의 움직임

1921.4	미곡법 제정
1925	미곡법 1차 개정
1927	소화 금융공황
1929	세계 대공황
1929.5	일본 내각 직속 ‘임시미곡조사회’(자문기구) 설치
1929-30	미곡법 2차 개정
1932.6.28	농림성, ‘미곡과’ 확장하여 ‘미곡부’로 개편
1932.7.23	농림성, ‘미곡부’내에 ‘고문회의’ 설치
1932.7-8	미곡법 3차 개정
1932.10-1933.3	미곡통제법 가결
1934.3	미곡통제법 1차 개정
1934.12-1936	미곡통제법 2차 개정

[표 4]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선미이출제한반대운동

1929.10	조선농회 전선농업자대회	일본 지주들의 식민지이입제한론, 미곡조사회의 각종 이입제한론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 개진 “제국식량의 수급조절에 관해서는 일선을 통하여 통일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건의안 결의
1929.11	조선미이입제한반대 동맹회 조직	
1930.10	조선농회 전선농업자대회	정부는 조선에서 속히 벼 600만석의 수매를 단행할 것, 총독부는 내년 신곡기까지 조(粟)의 수입제한을 단행할 것, 총독부는 농업창고의 건설 및 미곡저리자금 대출은 극력 이를 확장하여 즉시 행할 것

1931.2	제4회 조선농회 통상총회	“미곡수급조절정책은 내선을 통일하여 실현할 필요를 일층 통감하기에 이르렀기에 미곡법을 속히 조선에 연장하여 조선에서 벼의 수매를 단행할 것을 요망한다”
1931.11	조선농회 전선농업자대회	“미곡법을 조선에 적용하여 벼의 수매를 단행할 것, 야적벼에 대해 금융의 길을 강구할 것”
1932.7	선미옹호기성회 조직	“조선미에 대한 차별적인 미곡통제책은 조선에 있어서의 산미 및 경제를 사지에 빠뜨릴 것으로 인정되어 그 실현을 저지시킬 것을 기한다”
1932.11	선미옹호기성회	결의문 채택, 관계 요로에 타전
1932.11	선미옹호기성회	절대 반대 전문 요로에 타전
1932.11	조선농회 전선농업자대회	기성회와 유사한 내용의 전문 요로에 타전
1932.11	전선거래소연합회	결의문 채택, 관계 요로에 타전, 3명의 위원 동경에 파견
1932.11	조선상공회의소	임시총회 결의문 채택, 각 방면에 타전, 3명의 위원 동경에 파견
1932.11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임원총회 결의문 채택, 관계 요로에 타전, 각 조합에 발송하여 지역마다 반대대회 개최 촉구
1932.11	평북곡물업자대회	
1932.11	선미옹호군산기성회	
1932.11	선미옹호강원유지대회	
1932.11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동경 개최 전국미곡상조합연합대회에 위원 9명 파견, 일본 미곡상과 공동전선 모색할 것을 결정
1932.12	선미차별대우반대 인천부민대회	
1932.12	대구간담회	

3. 재조일본인세력과 일본 본국

1) 일본 본국과 재조일본인세력의 관계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 행위자를 분석하기에 앞서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 및 재조일본인의 관계를 일반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큰 흐름 속에서 이후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일본 제국이 내세우던 식민지재정운영원칙은, 식민지와 본국이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각기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서 서로에게 통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무육주의(撫育主義)’였다. 이와 같은 노선은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가 독자적인 조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 되어왔다(기유정 2011 b, 199). 또한 조선은 본래 분리통치체계 하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통치되는 것으로 하였다. 19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민간 재조일본인들도 조선인들과의 분리지배가 철저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유정(2011 b, 202)⁷⁾은 데라우치 조선총독이 천황을 만난 자리에서 발표했던 담화문을 문서화 한 “조선 통치 3년의 성적”이라는 글의 일부를 통해, 당시 총독이 조선 통치에 임하는 본인과 총독부의 위상을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상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하나의 고유한 국가 체제를 접수하여 통치하는, 위임 통치권력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던 것이다.

기유정은 계속해서 조선총독부가 일본 본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조건을 조선 통치의 법적 구조인 ‘이법역(異法域) 체계’로 설명하였다. 이법역 체계는 내지와 외지의 지역적

7) “재조선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척지식민론”자들이 식민정부의 역할과 성격에 기대했던 내용과 충돌. 척지식민론에 따르면 조선통치는 일본의 인구 과잉과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일본인들의 이주정착지로 적합하게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역할 역시, 척지식민을 독려하고, 이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척지식민론은 조선총독부를 식민지의 통치 권력이라기보다는 ‘이주민의 정부’로 보는 ‘도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유정 2011 b, 203)

인 차이를 고려하여 단일한 법지배체계로 통치하지 않고 각각의 지역에서 독립된 법체계가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제국이 일본-내지와 조선을 포함한 식민지-외지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다른 법체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법역 체계가 작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에서 지역적 근거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조선총독의 명령이었고, 따라서 당시 조선총독이 조선 내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졌는지, 또 일본 본국 정부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조선총독의 통치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관여를 받지 않은 완전하게 독립된 통치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⁸⁾ 일본 정부는 법률 제30호 2조와 3조 등을 통해 총독권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았으나, 당시 조선총독의 위치가 일본의 내각 수상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고,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차기 수상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통치부가 비록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는 근대국가의 일원적 법지배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법역 체계를 철폐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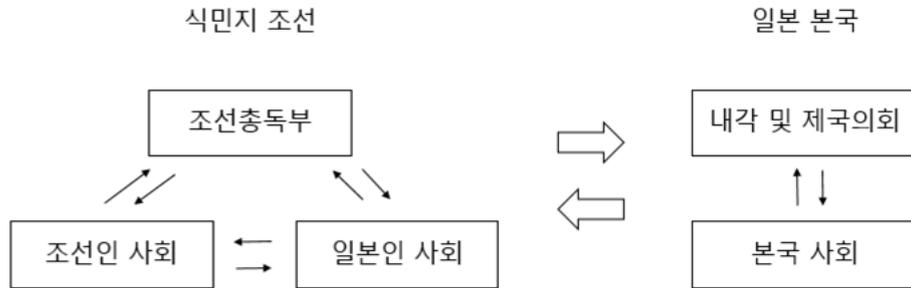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 혹은 심화시키기 위해 조선인뿐만 아니라 재조일본인에 대하여서도 속지적 장악력을 키워나갔다.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나 민족적 구분 없이 일원화된 통합행정제도 하에 들어오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 것이다. 이것은 ‘내선융화론’이라는 기치 아래에 이루어졌고 1936년 이후 ‘내선일체’로 그 구호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노력은 정치적 효과를 상당히 발휘하게 되어서 19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인과의 분리 정책을 요청하

8) “여기서 말하는 조선총독부의 독자성이란 총독부의 조선통치가 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마치 독립된 하나의 국가처럼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형식(2011)의 주장처럼, 총독부와 본국 권력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독자성이 강했던 1910년대조차도, 총독(및 정무총감)의 임명이나 예산 심의 등을 둘러싸고 긴밀한 논의가 존재하는 등의 상호 정치과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독자성은 거시적이고 핵심적인 몇 가지 법적 조건의 차원에서 총독부가 일반적인 내각 행정 기구와 동일할 수 없는 구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기유정 2011 b, 각주 22)

있던 재조일본인들은 이제 분리된 행정정책으로 인한 불편함과 조선이라는 하나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서 오히려 단일한 법체계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인 對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대결구도 이외에 ‘조선 對 일본’이라는 지극히 지역적인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재조일본인 세력은 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보다 조선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들의 이해득실을 먼저 고려하고 그에 따라 선미이입통제라는 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선미옹호운동은 미곡 직접 생산자인 조선인의 안녕을 위하거나, 재조일본인들이 정치적 혹은 도덕적으로 조선인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본인들의 경제적 이해득실 논리에 따라서 일본 제국 하의 하나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자 식민지 정치 주체로서 본국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조선총독부가 미곡법에 강한 반발을 보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혐의가 짙다. 일본 정부에서 미곡법 관련한 논의가 철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조선총독부를 배제하고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총독부가 불만을 품게 된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농림성 미곡부는 1932년 7월 있었던 고문회의에서 미곡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 내용을 비밀에 부쳐서 총독부조차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조선미의 이입을 제한하는 것이 고려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총독부는 이를 두고 “선미를 우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총독부 무시의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김제정 2009, 82). 총독부로서는 상당한 자율성으로 조선 통치 전반을 맡고 있었음에도 농림성의 비밀회의에서 조선 통치 상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곡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한 자율성 침해로 느껴졌을 공산이 크다. 이로써 선미옹호운동은 재조일본인세력과 조선총독부가 일본 본국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켜내려 했던 정치 행위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재조선일본인의 정치과정⁹⁾



2)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논리적 근거

본 절에서는 재조선일본인에서 선미옹호운동세력으로 범위를 좁혀서 그들의 입장과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은 다음의 기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 조선 국민들, 조선 농촌을 위하여 선미옹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국가의 권력으로써 미곡통제를 도모하게 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여하하든 일반 국민생활에 큰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조선미의 대한 차별적 강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마침내 조선의 농촌은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목적을 같이하여 최후까지 승리가 돌아올 때까지 항쟁할 것을 선언한 후”¹⁰⁾

오호성(2013)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이 선미이입통제에 반대하는 논리를 정리하였다. 1) 선미 이입량 통제 시도는 조선 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정치적인 문제이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다. 2) 선미 이입

9) 기유정(2011b, 208)

10) <동아일보>, “목포시민대회 미곡통제반대.” (1932.11.29.)

량을 통제할 경우 조선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조선 경제 전체가 황폐화 될 것이다. 3)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계층은 미곡 직접 생산자 계층이다. 다음의 두 기사를 통해 각각 오호성이 제시한 첫 번째 논지와 두 번째 논지를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엿볼 수 있다. 미곡의 직접 생산자 계층을 우려하는 마지막 논지는 사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민족주의 계열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던 것으로, 자가용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에 시달려 다량의 미곡을 궁박판매(窮迫販賣) 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소작농을 우려한 목소리였다. (기유정 2009, 346)

“... 금일(今日)에 조선미의 특별취급을 한다고 함은 미곡정책상 불가할 뿐 아니라 조선통치 상 불허할 바이다. ... 정부는 미가(米價)를 공정(公定)하는 등 통제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것은 일본, 조선 공통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¹¹⁾

“미곡통제 실시문제로 전조선각지에서 치열한 반대운동이 날로 그 기세를 높여오던 차 ... 정부에서 제창하고 있는 미곡통제문제에 대하여 조선미차별대우안은 조선산업기초의 전 기구(全機構)를 파괴하는 동시 당업자의 전 생업을 위협하는 것이라 하여 조선미옹호에 대한대책을 협의하는 일방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켜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항쟁할 것을 결의...”¹²⁾

한편 선미이출입제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외지미,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미의 이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함을 통해서 일본 본토 내의 미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기유정(2009)은 이와 같이 내지 경제의 이해에 따라서 식민지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본의 행위가 ‘모국중심주의’에 가깝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제국으로서의 일본, 즉 본국과 식민지

11) <동아일보>, “고교장상(高橋藏相)은 차별을 반대.” (1932.08.03.)

12) <동아일보>, “조선미차별대우안(朝鮮米差別待遇案)은 조선 산업 기초 파괴.” (1934.02.08.)

영토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는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일본 본국만 위하는 ‘일국가주의’적 경향이 내재해 있다고 하였다. ‘일국가주의’적 관점은 ‘경제 현실주의’로 이어지면서 일본 내에서 선미 이출입 관련 논의는 정치보다 경제 논리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의 조선미 이입 통제 시도는 선미옹호운동을 펼쳤던 재조일본인세력에 의해 조선 내 미곡창고 설치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월별 선미 이출량을 조절하는 정도에 그치며 근본적인 선미 통제는 좌절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국중심주의적이고 일국가주의적인 일본의 “보호주의적 경제 장벽 설치 과정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재조 일본인세력과의 협의 과정 중 후퇴되었다.

“조선농회에서는 ... 협의한 결과 ... 이는 일본과 조선을 별개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론이오 ... 고로 조선으로서는 식량의 충실과 및 수급조절은 모름지기 일본과 조선을 통하여 일본 영토 내를 통일한 정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³⁾

“... 또 조선에서도 산미계획도 모순이 생겨 차별대우의 결과는 통치상에는 지장이 생기는 사실이 있으므로 미곡법을 조선에도 시행하여 일본과 같이 미매상을 하라고 조선농회에서는 조선상공회의소에 호응하여 ... ”¹⁴⁾

김제정(2009)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조선미 이입제한 반대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조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가 폭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조선의 이해는 서로 일치한다. 2) 식민지에 대한 차별대우이며, 따라서 통치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총독부의 입장은 위의 민간 재조일본인세력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성일보> 역시 ‘식민지’, 즉 일본과 다른 존재로서 특별 취급 받는 대상으로서의 조선이 아닌, 일본의 일부이지만 민도 수준 발달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내지’로 편입될 수 있는 ‘외지’로서의 조선을 주창하

13) <동아일보>, “미곡문제엔 통일책을 쓰라.” (1929.09.28.)

14) <동아일보>, “조선미도 매상하라! 미곡법시행 당연.” (1931.02.11.)

는 ‘내지연장론’의 입장을 관철했다. 선미 이출을 옹호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일관된 논리는 일본 정부에게서 내비췄던 일국가주의적 관점과 반대되는 ‘제국의 관점’이다. 즉 ‘일한병합의 성지’에 기초하여 내선일체, 내외지동치의 관념으로 조선을 통치하는 것을 지향함을 의미한다(기유정 2009).

Ⅲ. 선미옹호운동 관련 단체 및 주요 인물 분석

1. 분석의 개요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의 행위자 분석을 실시한다. 재조일본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분석이나 당시 문학 작품이나 언론에 나타난 재조일본인에 대한 표상에 대한 분석 등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이규수(2013)는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재조일본인 전체의 인구변화 양상을 수량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연도별, 출신지별, 산업별, 지역별 인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개인만 살펴보거나 전체 재조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미옹호운동에 연관된 단체와 각 단체에서 주요하게 활동했던 수십 명의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전반적인 특성 및 단체별 특징을 알 수 있다.

분석을 위한 원자료(raw data)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채집하였으며, 선미옹호기성회, 조선농회, 조선곡물상조연합회, 상업창고, 미곡창고, 조선상공회의소, 취인소연합회, 이상의 7개 단체의 주요 행위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표 7~21]의 명단 및 이력을 구성하였고, 행위자들의 이력은 민족, 생년, 학력과 더불어 미곡·토지, 은행·보험·증권, 무역·운수, 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각종 협회로 구분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체 이름 등을 알아보았다. 두 개 이상의 단체에서 주요인물 명단에 들어가 있는 개인의 경우, 앞선 순서의 표에 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뒤따라 나오는 순서의 표에서는 이름만 기입하였다. 생년 항목에 연도가 두 개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자료에 따라 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이름만 기입되어 있거나 이름조차도 성씨만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신문 기사에서 그 인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구체적 정보를 찾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자표

기의 일본식 발음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으며, 확인된 일본식 발음만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2. 선미옹호기성회

선미옹호기성회는 1932년 7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주도되어 설립되었으며 조선의 미곡관련 부르주아 계층이 총망라된 단체였다(기유정 2009, 329). 선미옹호기성회의 창립은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창립발기인 13명의 성명이 모두 발표되었다. 13명 중 11명의 일본인, 동경대 출신 인사가 4명, 동경육사 1명, 동경법학원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일본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10명은 공직자 출신이었으며, 그 중 문관고등시험 합격자 3명, 문관보통시험 합격자는 1명이었다. 선미옹호를 위한 전문적인 민간단체라고는 하지만 그 배경은 단순한 민간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선미옹호기성회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단체들에서의 겸임 비율이 가장 높은 단체라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선미옹호운동의 가장 주요한 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문 기사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상공회의소, 조선농회, 취인소연합회, 곡물상조합연합회, 선미옹호기성회가 참여하였던 조선미대책협의회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는 “조선미옹호기성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 단체의 조선미대책협의회의 결과...”¹⁵⁾, “기성회 중심으로 각 단체 일치결기”¹⁶⁾ 등으로 표현하며 다수의 단체들 중에서 선미옹호기성회를 가장 주요한 행위자로 소개했다.

분야별 사업 종사자 수를 헤아려보면 미곡·토지 관련업 10명, 은행·보험·증권 등 8명, 무역 및 운수 3명, 기타 각종 상업 8명,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등 9명으로, 무역 및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선미옹호기성회 창립발기인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인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5) <동아일보>, “조선미옹호기성회 중앙요로에 타진.” (1934.02.05.)

16) <동아일보>, “기성회 중심으로 각 단체 일치결기.” (1934.02.04.)

1873~1888년생으로 구성되어 선미옹호운동 당시 주로 5, 60대였으며 은행가, 지주, 관료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되었다(기유정 2009, 329).

3. 조선농회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선농회는 농업의 지도 및 장려에 힘쓰는 권농기관으로, 본회를 경성에 두며 농업에 관한 조사연구, 회보 발간, 강연회 개최 등의 사업을 벌였다. 이와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던 일본의 단체로는 제국농회가 있다.¹⁷⁾ 선미옹호운동과 관련하여 조선농회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방면은 전조선농업자대회의 개최이다. 전조선농업자대회는 조선농회의 고문들 및 각도 농회의 임직원, 전조선 각지 유력 영농자, 총독부 측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일반적인 농업자들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전조선농업자대회가 열린 장소는 경정부 사회관이나 총독부 회의실인 경우가 많았다는 면에서도 조선총독부와 조선농회의 긴밀한 관계를 어렵짐작 해 볼 수 있다.¹⁸⁾

본 연구에서 파악한 조선농회의 임직원은 일본인 28명, 조선인 7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1862년생부터 1892년생까지 다소 넓은 나이분포를 보인다. 그중 동경대에서 법과 출신 4명, 농과 출신 3명, 총 7명이 졸업하였고, 그밖에 각각 동경수의학교 1명, 나가사키 미션스쿨 1명, 육군호산학교 1명이 졸업했다.

미곡과 토지 관련한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명인데, 그 중 후지이 칸타로(藤井寛太郎)는 유력한 대지주로 저명했다¹⁹⁾. 조선농회는 그

17) <동아일보>, “조선농회는 무엇하는게냐.” (1931.05.07)

18) <동아일보>, “미곡문제엔 통일책을 쓰라.” (1929.09.28.); “각 도대표 대책을 토의.” (1930.10.21.); “전조선의 농업자.”(1932.11.15)

19)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는 등본합자회사(藤本合資會社)가 조선에서 경영한 사업을 계승하고 일본 자본가들이 자본금 1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 원래 농장경영과 개간사업에 주력했으나, 이후 부동산 신탁, 이민사업도 겸영함. 1936년 1월 현재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평안북도 등지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을 꼽으면 全北農場, 西鮮農場, 沃溝農場, 鐵原農場 등이

이름에 걸맞게 명단에서 이름 이외의 정보까지도 파악되는 인물 29명 중 과반이 넘는 16명이 미곡·농업 종사자이지만, 공직 경험자는 그보다 6명이 나 많은 22명이었다. 그중 문관고등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3명이었고, 함경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명으로, 다양한 공직 경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코마다 히데오(兒玉秀雄)와 이마이다 키요노리(今井田清徳)는 둘 다 공직생활밖에 거치지 않은 관료로서 조선농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정무총감에 재임중이었다는 사실에서 조선총독부와 조선농회와의 깊은 커넥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밖에 은행·보험·증권 등 종사자는 9명, 거래·무역업 종사자는 2명, 공공사업 경험자는 14명이었다.

4.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는 1917년 조직되었으며 조선 각지의 미곡상이나 정미업자 등이 속한 곡물상조합의 상위단체였다(이혜인 2014, 8).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는 선미옹호운동에 있어서 정부의 선미 매상에 대한 조선농회의 구제안에 대해 반대하며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²⁰⁾, 미곡통제안 내용에는 절대 반대를 결의하는 등²¹⁾ 적극적으로 선미이출입제한에 대응했다.

신문 상 파악된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임역원은 총 16명, 그 중 자세한 신상이 파악된 사람은 15명이었다. 이들은 1865~1884년생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일본인 13명, 조선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역시 일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학력사항으로는 동경법학원을 졸업한 아루가 미츠토요(有賀光豊)가 유일했다. 미곡·토지 관련업 종사자는 12명, 은행·보험

있으며, 특히 沃溝農場은 2,500정보를 간척한 것으로 이 사업의 모범으로 평가받음. 초기에는 경기도 인천과 전라북도 군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정미업과 무역업을 겸영함. 이후 1917년에 자매회사인 不二商業株式會社를 창립하고 지점을 폐쇄한 후 정미업과 무역업을 인계함. 이후 자본금을 500만원으로 증자하여 농촌진흥과 농사개량 등에도 힘을 쏟음. 불이흥업株式會社의 수리사업은 애초에 국가적인 대사업으로, 조선산업개발에 애쓴 공은 그야말로 훈1등감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藤井寛太郎”)

20) <동아일보>, “조선미 매상 농회가 대행.” (1932.08.24.)

21) <동아일보>, “미통반대차.” (1932.11.22.)

·증권 등 종사자 4명, 거래 및 무역 종사자 5명, 기타 각종 상업 종사자는 9명, 공공사업이나 각종 협회 참여자는 6명이었다. 공직생활 경험자는 2명으로 다른 단체들에 비해 공직자 수가 현저히 적은 편에 속하며, 두 명 중에서도 아루가 미츠토요만이 문관고등시험 합격자이자 조선총독부 관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전반적으로 미곡, 토지, 상업 이외의 분야에 관여하는 비율은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각 연합회의 회장과 간사장을 맡았던 아루가 미츠토요, 사이토 히사타로(齋藤久太郎), 텐니치 쓰네지로(天日常次郎)를 제외한 인물들의 지역 기반은 경성 3명, 인천 2명, 목포 4명, 부산 3명, 대구 1명으로 주요 미곡항이 있던 지역 위주의 인사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5. 상업창고,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193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표된 ‘조선미곡창고계획’은 농업창고와 상업창고의 설치 및 경영을 가장 주요한 두 가지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업창고는 일반 농가가 추수기 이후 농작물을 일시에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주요 쌀 생산지에 농회나 산업조합이 경영주체가 되는 소규모 창고였으며, 상업창고는 1930~34년 동안 주요 쌀 이출항에 대규모 창고를 설치하여 일본으로의 선미 이출 시기를 조절하는 과제 해결을 핵심으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²²⁾ 상업창고의 경영은 일반 민간회사를 설치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창고 운영을 담당하게 했다. 이 역할을 맡은 민간회사가 바로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조선미창)이다.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는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조선미곡창고계획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특히 상업창고에 대하여 곡조연합회는 ‘친부모와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상업창고를 크게 성공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곡조연합회와 상업창고는 긴밀한 관계였다(이혜인 2014).

<동아일보>는 상업창고의 경영주체인 조선미창에 대한 간담내용에 의하면

22) <동아일보>, “조선미제한 대책을 강구키로.” (1932.07.15.)

조선미창을 “일본 내 대 자본가의 투자에 의한 신설회사”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를 “양 민족 간에 동액동수의 투자”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²³⁾ 이와 같은 상업창고 운영 및 조선미창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선미옹호운동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되었다.

상업창고 발기인의 민족구성은 총 31명 중 일본인 25명, 조선인 6명으로 일본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1865~1884년생이었으며, 동경대 졸업자는 법과대 출신 2명, 농과대 출신 1명이었다. 그 밖에 각각 한 명씩 북청실업학교, 동경법학원, 사립성성학교를 졸업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명 이외의 약력이 파악되는 사람들은 총 20명인데 그 중 미곡·토지 관련업 종사자는 16명으로 상업창고 창립발기인의 약 3/4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었다. 은행·보험·증권 등 종사자는 7명, 거래 및 무역 종사자는 4명, 기타 각종 상업 종사자는 11명, 공공사업 관련자는 13명이었다. 공직생활 경험자는 12명이었는데 그 중 문관고등시험 합격자는 3명, 조선총독부 관료 생활을 한 자는 4명이었다.

한편 조선미창 발기인은 총 33명으로 1865~1884년생으로 이뤄졌고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일본인 27명, 조선인 6명). 학력사항은 상업창고와 비슷하게 동경대학 출신 3명, 북청실업학교, 신호고등상업학교, 사립성성학교, 동경법학원 각 1명씩이었다. 미곡·토지 관련업 종사자 12명, 은행·보험·증권 등 종사자 7명, 거래 및 무역 종사자 4명, 기타 각종 상업 종사자는 11명, 공공사업 관련자는 18명이었다. 공직생활 경험자는 17명이었는데 그 중 문관고등시험 합격자와 조선총독부 근무 경험자는 각각 3명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상업창고 발기인이 21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위에서 언급되었던 상업창고와 조선미창의 긴밀한 연관성을 실제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선미옹호기성회와 조선농회 인사도 각각 5명과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선미창의 발기인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미창 사장이 되는 마즈이 후사지로(松井房次郎)가 선미옹호운동 관련 기사에서 보통 “선미옹호기성회의 송정(松井, 마즈이) 미창 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²⁴⁾ 선미옹호기성회와 조선미창 모두 중요한 선미옹호운동

23) <동아일보>, “미이출통제간담회” (1930.03.11.)

24) <동아일보>, “외미 차별대우에 조선미옹호회 분기.” (1933.10.06.); “추이여하로 반대의

단체지만 기성회가 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한편, 상업창고 발기인은 경성(12명)과 인천(5명)을 중심으로, 전남, 경남, 평남(이상 3명), 함남(2명), 황해, 경북, 강원(이상 1명) 등 전국에서 모집되었다. 조선미창은 경성(12명), 인천, 부산(이상 3명)과 더불어 목포(4명), 진남포(2명), 해주, 함흥, 원산, 군산, 김제, 철원, 수원(이상 1명) 지역에서 발기인들이 참여했으며 주요 항구도시 출신 인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조선상공회의소

조선상공회의소(조선상의)는 1932년 1월 조선총독부 고시 제8호를 통하여 설립되었다.²⁵⁾ 이를 위해 1931년 10월에 조선상공회의소 창립발기인회가 경성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동아일보>는 조선 내 다수의 상공회의소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인 기구로서 조선상의 설립 목적을 밝혔다.²⁶⁾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선상의의 지부는 조선 전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조선상의의 주요 임역원 리스트는 <동아일보>에 노출된 이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총 70명의 이름을 발굴했지만 그 중 세 명은 민족조차 확실치 않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정보를 거의 찾지 못했다. 따라서 민족 구분 가능한 인물은 총 67명, 그 중 이력까지 파악된 사람은 53명이다. 조선상의 주요 임역원 중 미곡·토지 관련업 종사자는 12명, 은행·보험·증권 등 종사자 20명, 거래 및 무역 종사자 13명, 기타 각종 상업 종사자는 48명, 공공사업 관련자는 28명으로 파악됐다. 공직생활 경험자는 17명이었는데 그 중 문관고등시험 합격자는 1명(가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조선총독부 관료 생활을 한 자는 4명이었다.

조선상의가 조선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음에도 경성과 인천지부의 의원

운동.” (1933.10.07.)

25) <동아일보>, “조선상의설립.” (1932.01.08.)

26) <동아일보>, “전조선의 상의를 창립.” (1931.10.23.)

이름이 신문지상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다. 조선상의 경성의원은 1급의원 15명과 2급의원 13명으로 총 28명, 인천의원 15명, 함흥 9명, 군산 2명, 대구, 목포, 진남포, 부산은 각 1명씩 파악되었다. 전국적으로 지부를 가지고 있던 조선상의지만 경성과 인천이 압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 지역을 알 수 없는 의원도 12명 있었다.

7. 조선취인소연합회

조선취인소연합회는 조선 각지의 취인소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기사에 따라 전국미곡취인소연합회로 불리기도 한다. 취인소는 오늘날의 거래소를 의미하는데, 조선취인소연합회는 조선 각지의 취인소들의 연합을 말한다. 인천미두취인소가 조선 최초의 쌀 시장으로 등장했으며, 1932년 인천취인소와 경성주식현물거래소가 합병되어 조선취인소가 되었다. 특별히 미두취인소란 현물 없이 쌀을 사고파는 일인 미두(米豆)를 거래하는 기관을 일컫는데, 현재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의 쌀 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오간다. 인천미두취인소 당시 시세가 오사카미두취인소를 기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보를 미리 알아내 이득을 취하는 일본인이 많았고, 그에 반해 경험과 정보 모두 부족한 조선인들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 취인소별로 주요 인물들을 파악했는데, 총 78명의 이름을 수집할 수 있었고, 그 중 민족 구분이 가능한 사람이 74명, 약력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은 53명이었다. 74명 중 일본인은 56명으로 75%를 차지했고, 조선인은 18명에 불과했다. 미곡이나 토지 관련한 사업에 몸을 담은 사람들은 53명 중 36명으로 약 68%, 은행·보험·증권 등은 11명, 거래 및 무역 종사자 31명, 기타 각종 상업 종사자는 33명, 공직생활 경험자 17명, 그리고 공공사업 관련자는 12명이었다. 취인소 인물들은 주로 미곡, 거래나 무역, 각종 상업에 관련되어 있었는데, 상인들의 비중이 많아서인지, 선미옹호운동 진행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과의 연합은 물론이고 특별히 상공단체와 제휴하자는 구체적인 목소리도 있었다.²⁷⁾

8. 소결

본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치화 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민족 구성은 이름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력을 찾지 못하고 이름만 파악된 인물들을 포함하여 통계를 냈으며, 직군별 통계는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분모로 하였다.

선미옹호운동세력 중 주요 7개 단체 중 조선상공회의소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서 일본인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가장 눈에 띈다. 나머지 약 20%의 조선인들도 일본 귀족이 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등 조선 농민의 편은 아닐 것으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을 고려한다면,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사실상 조선인의 미곡 수급이나 농촌 안정은 안중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7개 단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미옹호기성회의 경우 가장 높은 일본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생각에 합리성을 더한다.

선미옹호기성회와 조선농회는 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영단체처럼 공직 경험이 있거나, 공직에 재직 중인 사람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특함을 보였다. 상업창고와 미곡창고 역시 과반 이상이 공직자였는데,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전반적으로 민영의 성격을 띠려 했으나 구성원에서부터 조선총독부와의 깊은 연관성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선미옹호운동은 선미에 관한 문제인 만큼 미곡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인물들의 참여가 확실히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곡물조합연합회는 무려 93%, 선미옹호기성회와 상업창고는 75% 이상, 농회 50% 이상, 미창 40%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두 미곡이나 토지 관련된 일에 종사했다. 반면, 상인들 위주로 조직된 단체인 조선상공회의소는 20%가 겨우 넘는 인물들만이 미곡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표 6]에서는 선미옹호운동세력들 간의 상호관계를 주요 인물들의 껌임 상황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한다. 선미옹호기성회는 총인원 13명 중 9명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하였는데, 요시다 슈지로, 한상룡,

27) <동아일보> “상공단체와 제휴하여 조선미통제에 반대.” (1934.01.23.)

[표 5] 선미옹호운동단체 민족별, 직종별 통계

(단위: 명)

	일본인	조선인	미곡	은행	무역	기타	공직	공공
기성회	11/13	2/13	10/13	8/13	3/13	8/13	10/13	9/13
	84.62%	15.38%	76.92%	61.54%	23.08%	61.54%	76.92%	69.23%
농회	28/35	7/35	15/29	9/29	2/29	12/29	22/29	14/29
	80%	20%	51.72%	31.03%	6.90%	41.38%	75.86%	48.28%
곡련	13/16	3/16	14/15	4/15	6/15	12/15	3/15	6/15
	81.25%	18.75%	93.33%	26.67%	40%	80%	20%	40%
상창	24/30	6/30	15/19	7/19	4/19	11/19	12/19	13/19
	80%	20%	78.95%	36.84%	21.05%	57.89%	63.16%	68.42%
미창	27/33	6/33	13/29	7/29	4/29	11/29	17/29	18/29
	81.82%	18.18%	44.83%	24.14%	13.79%	37.93%	58.62%	62.07%
조상	48/67	19/67	12/53	20/53	13/53	48/53	17/53	28/53
	71.64%	28.36%	22.64%	37.74%	24.53%	90.57%	32.08%	52.83%
취연	56/74	18/74	36/53	11/53	31/53	33/53	17/53	12/53
	75.68%	24.32%	67.92%	20.75%	58.49%	62.26%	32.08%	22.64%

[표 6] 선미옹호운동단체 결입 상황

	기성회	농회	곡련	상창	미창	조상	취연
카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				○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	○	○	○	○		
마츠이 후사지로 松井房次郎	○	○					
미츠이 에이쵸우 三井榮長	○	○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			○	○	○	
한상룡 韓相龍	○	○		○	○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		○	○	○		
후나코시 미츠오 船越光雄	○	○					
타부치 이사오 田淵勳	○	○					
카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郎			○	○			○
텐니치 쓰네지로 天日常次郎		○	○				
하마사키 키사부로 濱崎喜三郎			○		○		○
후지이 칸타로 藤井寛太郎		○		○	○		
아이사와 쇼조 相澤長三		○		○	○		
이타니 기사부로 井谷義三郎				○	○		
와다 이치로 和田一郎				○	○		
마츠바라 주이치로 松原純一				○	○		
민대식 閔大植				○	○		
아사카와 마사 淺川真砂				○	○		
아라이 하츠타로 荒井初太郎				○	○		
사와다 토요타케 沢田豊丈				○	○		
와타나베 테이이치로 渡邊定一郎				○	○		
이시하라 이소지로 石原磯次郎				○	○		
김상섭 金商燮				○	○		○
우치다니 만페이 内谷萬平				○	○		○
무라카미 나오스케 村上直助				○	○		○
타치카와 로쿠로 立川六郎				○	○		
강철모 姜哲模				○	○		
이종섭 李鐘燮					○	○	○

사이토 히사타로는 기성회 포함 네 개의 단체에서, 아루가 미즈토요는 무려 5개 단체에서 요직을 맡았다. 선미옹호운동세력에서 기성회의 압도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업창고와 조선미창의 경우 해당 단체들의 설립 목적에서부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도 자연스레 많이 겹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920~30년대 한반도에서의 선미옹호운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정치적으로 대항하였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선미옹호운동의 독특한 점은 이들의 의견이 일본 정부와 내각의 의견을 이기고 끝내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주장은 선미이출이 조선 통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통치의 안정화를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이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 경제에서의 농업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조선의 미곡 정책과 조선 통치의 안정성에 큰 상관성이 있다는 조선총독부의 판단은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부와 같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일본 농민들을 경제대공황에 이은 쌀값 폭락에서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미이출입을 제한하려 했지만, 애초의 계획(수량 제한) 실현에 실패하고 수출 시기 조정이라는 결론에 만족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일본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제안을 많이 수용한 결론을 내게 되었을까? 우선 일본인 대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갈등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분열과 갈등의 뿌리이지만 선미이출문제에 관한 한 갈등은 민족적 구별이나 우열에 의한 것은 아니었음이 명확하다. 본 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선미옹호운동세력은 대부분 재조일본인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갈등은, 거주 지역, 즉 일본 본국에 거주하는지 한반도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일본인 내부에 분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자연스레 두 분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세력의 경제적 이해가 협력이 아닌 갈등의 양상을 보이게 될 때, 즉 한 쪽이 이득을 취하면 한 쪽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그들은 일본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이

외에 본국 거주자와 한반도 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덧붙여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1920~30년대의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선미의 이출입은 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이해관계를 선명하게 갈라놓았고 그에 따라 각각은 전혀 상반되는 경제적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각각의 일본인 세력이 동원한 논리의 특징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일본 정부의 경우는 본국의 경제 안정과 농가 보호라는 경제논리를 제시한 반면,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제국통치를 내세워서 매우 원칙론적인 담론을 펼쳐갔다. 제국통치의 원칙이라 함은 앞서 살펴 본 ‘내선융화론’의 기초인데,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으로서 일본과 조선 통치의 동화와 일시동인을 의미한다.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로서 식민지 조선을 대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지’에 편입될 수 있는 존재로서 ‘외지’ 조선을 ‘공존공영’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국통치의 원칙은 기실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모두 이데올로기로서는 수용하고 있으나, 법적, 행정적으로는 조선은 이역(異域)이었고 이것이 선미 이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본과 한반도 양측에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선미 이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재조일본인세력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제국통치 원칙이 현실과 괴리된 점을 꼬집어 논리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일본 정부의 빈약한 경제논리를 이길 수 있는 원칙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유정(2009, 344)은 이것을 ‘경제논리에 대한 정치논리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과연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논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논리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치의 외피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뿌리 깊은 경제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골몰하였던 문제는 명백하게 경제 문제였으나 그것을 제국통치의 이념과 정체성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포장한 것이다. 정치적 담론의 포장은 적절한 명분으로 무장하지 못한 일본 정부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IV. 조선농민과 선미옹호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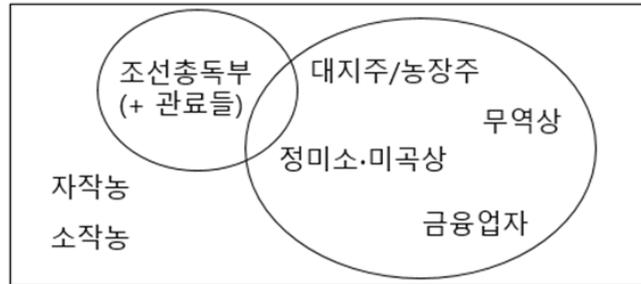
1. 분석의 개요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내부적인 특징들을 분석하여 대상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했던 것이 지난 장에서의 작업이었다면, 본 장에서는 대상의 외부자 시선을 통하여 정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는 선미이출입 관련 조선 내부의 주요 행위자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주로 큰 원 안의 행위자들, 즉 대지주/농장주, 무역상, 정미소/미곡상, 금융업자로 이루어졌음을 지난 장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역시 선미옹호운동에 동참하였으므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외부에서 그들을 바라보되, 선미이출입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는 행위자 그룹은 자작농 및 소작농 계층인 조선 농민들이다. 따라서 자소작농의 관점에서 선미옹호운동세력을 알아보려는 본 장의 시도는 첫째, 그간의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조선인과 선미옹호운동의 관계를 탐색하게 하며, 둘째,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내부적인 특질 혹은 발화를 통하여서만 그들을 분석하는 한계를 넘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이 주로 사용하였던 정치적인 수사는, 조선미이출입 통제가 “일반 국민생활에 큰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조선미의 대한 차별적 강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마침내 조선의 농촌은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목적을 같이하여 최후까지 승리가 돌아올 때까지 항쟁할 것”²⁸⁾이라는 식의, 다시 말해 조선인과 일치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선미옹호운동세력 개인의 민족구성,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와 이와 같은 수사에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할 때 각종 특성이

28) <동아일보>, “목포시민대회 미곡통제반대.” (1932.11.29.)

[그림 2] 선미이출입 관련 조선 내부 주요 행위자



나 발화의 분석 등의 내부적인 시선에서의 관찰뿐만 아니라, 외부자와의 관계에서 포착되는 모습을 알아볼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외부자 입장에 놓인 행위자는 일본 본국의 내각, 행정부, 미곡상, 지주, 농민, 조선총독부, 조선 농민 등으로 다양하게 상정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조선 농민과 선미옹호운동세력의 관계 내지는 전자가 후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 규명을 계속해보고자 한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재조일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즉 조선 내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타 행위자와의 관계를 보는 게 우선이다. 이때 조선총독부는 사실상 선미옹호운동단체와 매우 긴밀했던 행위자였으므로 총독부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은 별다른 장점이 없을 것이기에 본 고에서는 조선인 자소작농의 입장을 외부자 시선으로 취하여 선미옹호운동세력을 살펴보려 한다.

본 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조선 언론은 <동아일보>, <동광>, <별건곤>, <삼천리>이다. 이들은 주체와 독자가 모두 조선인인 주요 언론사이며 특히 적어도 1934년 이전에는 일제에 영합한 조선인이 아닌 일반적인 조선 민중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선미옹호운동세력과 함께 한반도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그들과 정치·사회·경제적으로는 분리된 계층의 조선인들의 시선을 기사에서 포착할 수 있다.

<동광(東光)>은 1926년 5월 20일 창간된 월간 종합잡지이며 편집자 겸

발행인은 주요한이다.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잡지들이 발행되는 것에 맞서 안창호의 흥사단과 수양동우회의 기관지 성격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1927년 8월 휴간되었다가 1931년 1월 이광수의 주선으로 속간했다. 속간 이후 정치시사 글, 민족주의적 입장이 담긴 글이 다수 실렸다. 1933년 1월 통권 40호로 종간되었다(그러나 제3호의 원고가 압수되었었기 때문에 실제 통권은 39호이다). 사상과 학문의 선전, 역사, 지리, 전설, 풍속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뤘으며 문예면에서도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양주동 등 실력과 작가들이 많이 활동했다.

<삼천리(三千里)>는 1929년 6월 창간하여 1942년 7월 종간된 교양잡지이다. 편집인 겸 발행인은 김동환이다. 1942년에는 <대동아>로 이름을 고쳐 두 호를 냈었는데 그 이후로 자취를 감췄다. 취미 중심의 잡지였지만 저급한 취미를 다루지는 않았고, 중견작가들의 글도 여럿 실렸다. 호기심을 끝만한 특종을 잘 포착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초기에는 민족적 입장을 취했지만 1937년부터 경향이 바뀌면서 끝내는 반민족적 잡지로 전락하였다.

<별건곤(別乾坤)>은 개벽사에서 창간한 잡지로, 1926년 11월 창간, 1934년 7월 통권 74호로 종간했다. <개벽(開闢)>의 뒤를 이어 월간으로 창간되었으며, 방탕한 기사들로 비열한 정서를 박멸하기 위한 건전한 취미잡지라는 취지가 있었다.

<동아일보(東亞日報)>는 1920년 4월 1일 창간된 종합 일간신문이다. 김성수를 대표로 하여 박영효, 장덕수, 양기탁, 이상협 등이 주요 편집자로 활약했다. 동아일보는 창간 때부터 민족지임을 천명했으며, 1928년 총독부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40,968부를 발행하여, <매일신문> 23,946부, <조선일보> 18,320부, <중외일보> 15,460부의 타 신문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있었다.

2. 정책 내용에 대한 비판

조선 언론에 드러난 선미옹호운동세력에 대한 조선 농민의 반응의 첫 번

째 특징은 정책 비판이다. 우선 조선 농민들은 선미이출입 제한의 조치를 가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²⁹⁾ 이 점에서는 선미옹호운동세력과 같은 입장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농민은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정책적 제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며 비판함으로써 선미옹호운동세력에 포섭되지 않는 조선 농민만의 입장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1930-31년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정부에서 정조(正租) 600만석 매상을 단행할 것과 농업창고의 건설과 미곡자금 대출을 속행·확장할 것을 결의했는데³⁰⁾ 조선의 신문과 잡지들은 이 결의의 허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물론 조선총독부에서도 조선 농민을 위해 정조 매상을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일 정조 매상이 실현되어도 이는 기실 직접생산자인 농민을 구제하기는 어려운 구조임을 역설했다. 주장뿐인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수사에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즉 정조 매상을 위해 필요한 세금, 미곡창고제도 운영에 사용되는 창고료, 담보대부금 등을 언급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미옹호운동세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 실행의 거의 모든 비용을 조선 농민이 지불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 조선 언론의 목소리였다.

“이 요구에 대하여 일본정부에서나 조선총독부에서 재정이 궁핍하고 게다가 긴축을 표방하는 이때에 과연 들어줄까도 자못 의문이니와 가령 이 안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는 농민 즉 직접생산자 중에도 소작농을 구할 수가 있을까 ... 그런데 정조를 매상한다 하더라도 그 정조가 언제든지 매출되고야 말 것으로 있다 하면 항상시가를 위협할 것이다. ... 정부매상정조를 그렇게 하면 그 매상가격이 대부분 농민의 세금이므로 필경은 미가에서 얻는 이익과 세금에서 잃는 해가 상쇄되어 결국 마찬가지로 되고 말 것이 아닌가.”³¹⁾

29) <삼천리> 제7권 제5호, (1935.06.01.) “조선미통제중흥관(현행대책과 자치관리안).”
“이제와서 외지미를 통제하려는 것은 외지산미 증산정책 그 자체의 모순과 위정자의 무정견을 폭로함에 지나지 못할 것이며”

30) <동아일보>, “정조 600만석 정부매상을 결의.” (1930.10.22.)

31) <동아일보>, 이봉수, “풍년공황과 농민의 각성 5.” (1930.11.11.) 이탤릭체 추가

“월별평균이입의 제한 ... 이 곤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 당국에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른바 미곡창고제도라는 것이다. ... 문제는 ... 미곡창고는 순수한 국가적 시설이 아니고 주식으로 된 일종의 영리회사이니 그것을 이용함에는 창고료와 및 담보대부금에 대한 금리를 지불치 않으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 그밖에 또다시 일본에의 자유이출의 불능을 구실로 하여 매입가격의 인하를 피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곡창고는 그나마 그 설치가 지방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거리에 있는 농민은 그 미곡의 운수관계상 아무리 하여도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 그 지방에 있는 농민이라 할지라도 ... 빈소농민으로는 또한 이것을 이용치 못하게 된 것이다.”³²⁾

<별건곤>과 <동광>에서는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정책적 대안을 넘어서서 산미증식계획의 중지라는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급진성을 보이기도 했다.³³⁾ 이는 당시 대다수 자소작농의 경제 역시 선미이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창출되는 이윤을 그들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이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통구조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다음의 기사는 미가문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5, 6명의 조선인 농민들이 나눈 대화내용이다. 조그마한 논농사로 생업을 이어가는 농민

32) <별건곤> 제34호, “조선사람의 운명을 제하는 당면의 농촌정책문제, 사회는 모름지기 큰 주의를 이에 던지라.” (1930.11.01.)

33) <별건곤> 제34호, “조선사람의 운명을 제하는 당면의 농촌정책문제, 사회는 모름지기 큰 주의를 이에 던지라.” (1930.11.01.)

“이번의 미가폭락은 가령 그 원인의 일부가 세계적으로 습래(襲來)하는 재계불항에도 있다. 하지만 ... 그 원인의 대부분은 도리어 대풍작과 및 월별평균 이출제의 실시를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인의 그 근원을 다시 추구하면 그것은 또한 다 무모한 산미증식계획의 결과로부터 생하는 것으로 ... 아직 얼마동안은 그렇게 일본의 식량을 위하여 서두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너무나 겁을 집어먹고 야단법석하기 때문에 마침내 오늘과 같은 사태를 연출하게 된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당국에 향하여 산미증식계획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 우리 농민은 차라리 산미증식계획의 즉시 중지를 요구코자 한다.”;

<동광> 제17호 “내외대관, 과거 1개월간 조선과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동향의 객관적 기록.” (1931.01.01.)

“ ... 산미증식계획의 일시중지 혹은 대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 ”

들에게 일본 본토에서 실시되는 기준미가 정책이나 그 정책의 여과, 혹은 새로이 시행되리라 여겨지는 조선미통제안 모두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실제 농민들의 대화로 흥미롭게 나타나 있다.

“- ...일본에는 기준미가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

- ... 하여간 조선 쌀값은 대개 일본 쌀값을 따라가게 되니까 얼만큼 그 영향을 입지.

- ... 글썄, 영향은 좀 입는다 하여도 그걸 사실 법으로나 정해 놓으면 몰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피피로 약은 짓을 하여서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는 것은 값 적게 사고 팔 때에는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만 드니까 할 도리가 있어야지. 사실 우리네가 벳섬이나 사 먹는[과는] 때는 요때 아닌가? 가을 끝에 벳섬이나 해 가지고 세금 하렸다 빛이나 갚아보렸다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벳를 제일 많이 사는[과는] 때가 이때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저 막 싸게 사려들지 않나. 그러다가 가난한 놈의 쌀이 다 없어지고 나면 주춤주춤 쌀값을 올린단 말이야. 참 알미운 노릇이지. ...

.....

- ... 요새 조선미통제안인가 무슨 안인가가 새로 생겼다더니 그건 무엇이라나?

- 허 그게 우리에게는 그리 고소하지 못한 안이야. 조선 쌀값이 헐하니까 조선 쌀이 자꾸 일본으로 들어가면 일본 쌀값에 영향이 미쳐서 결국은 일본 농촌에 공황을 줄 것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일본 농촌에도 여러 가지가 곤란과 피해가 심해가는 오늘 형편에다가 더 큰일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일본미가를 유지해서 일본 농촌을 구제하자면 대만이나 조선에서 들어가는 쌀을 통제 조절해야만 할 것이니 그통에 조선농민만 더 희생을 당하게 되겠지.”³⁴⁾

34) <별건곤> 제57호, “미가문제 농청좌담회.” (1932.11.01.) 이탤릭체 추가

선미옹호운동세력이 사용하던 언어와 그들이 제시한 정책적 대안의 괴리는 조선 농민들이 그들에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조선미이출입통제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선미옹호운동세력과 조선 농민은 같은 입장이었으나, 상황의 해결방식에서 두 행위자는 사뭇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³⁵⁾

“조선의 과잉미를 총독부에서 매상하여 일본에 쇄도하는 “불필요한 이출미”를 방지하는 동시에 조선내의 쌀값도 유지하려고 함이 정부의 대책인 듯합니다. 물론 조선미는 폭락을 면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조선농민은 구제되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농민은 궁핍에 못 이기어 작년 추수기에 작미 전부를 처분하여 버리고 지금엔 한 알도 팔 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후의 미가여하는 조금도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혈값으로 다량의 미곡을 매치하여둔 대무역상들이 “조선농민의 생명선을 위하여” 방금각지에서 쫓겨간 “선미옹호대회”의 시위운동회를 볼 때에 쓴웃음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매상으로 인한 미가의 유지 내지 인상은 일반 농민을 위함이 아니고 일부의 상인과 대지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³⁶⁾

조선 농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미옹호운동세력은 그들 스스로가 내세우며 일본 본국의 정책적 의지를 좌절시켰던 논리적 근거, 즉 조선의 농촌과

35) <동아일보>, “중소농 본위의 미곡책.” (1929.11.25.) 이탤릭체 추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선 특히 조선 내 2천 9백 여 만인이라는 절대다수를 점한 중소농과 소작인의 입장으로 보아 신법규제정에 의한 이입통제책에 절대반대는 물론이 아니라 그 소위 농업창고설치, 저리자금융통 등 경제적 시설에 의한 이입통제책에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소위 경제적 시설에 의하여 이익을 볼 사람은 농업창고를 이용하며 저리자금의 융통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조선 내 소수의 호농과 미곡상에 불과한 까닭이다. 고로 이 제도에 의하여서는 설사 일본으로 보아 조선미의 일시적 거량유입을 제한하는 목적은 달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 시설을 이용할만한 경제력이 없는 절대 다수의 중소농과 소작인은 도리어 호농, 미상 등의 농락을 받게 되는 관계로 신곡기의 미가폭락으로 도리어 손해를 볼 것이다.”

36) <동아일보>, 김광진, “소작료 경감하고 수리조합은 국영.” (1934.02.13.) 이탤릭체 추가

농민을 고려한다면 선미이출입은 제한되어서 안 된다는 말과는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이 각종 방식 -단체 설립, 결의문 타전, 도동(渡東)위원 파견 등-으로 제안한 정책적 대안들이 조선 농촌, 농민의 실상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들의 정책적 대안은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주요 멤버들인 지주, 미곡상, 상인, 관료 등 다양한 재조일본인을 위한 내용으로 이뤄져있었으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정도로 선미를 옹호했지만 정작 조선 농민들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조선 언론들은 이러한 점을 비판하였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수사적인 표현과는 달리 철저하게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였던 단체들의 총합이었던 것이다.

3. 조직 구성에 대한 비판

조선 언론이 선미옹호운동세력에서 내세운 각종 정책적 대안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비판했던 반응의 근거에는 그 대안들이 중소농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 언론은 미곡상이나 대지주만을 위한 대안적 정책이 제안되는 이유를 선미옹호운동세력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찾았다. 선미옹호운동은 정상(政商)의 결탁, 즉 조선총독부와 미곡상들의 결탁을 골자로 한다는 비판에서부터, 조선인의 8할이 농민인 상황임에도 선미옹호운동세력에 관여된 개인들은 일본인 경제계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다수 있었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조직 구성이 조선 농민을 대변할 만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민족보다는 경제적, 계층적 차원에서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³⁷⁾

37) <동아일보>, “政商의 결탁 미곡대회는 하자.” (1930.10.27.) 이탤릭체 추가
 “... 정상(政商)의 결탁을 부끄럽 없이 하는 예가 있으니 ... 청주에서 개최되었던 전조선미곡대회와 같은 자도 그 일레다. ...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대회란 자는 전조선에서 미곡의 판매에만 중사하는 사람, 즉 생산자인 농민에게서 정조를 사서 소비자, 정미업자 그리고 대부분은 일본에 있는 미곡상에게 현미로서 다시 팔아서 그 중간의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의 회합이다. 그들의 목적하는 바는 오직 어떻게 하면 벼를 헐하게 사서 비싸게

“지난 5, 6 양일에 걸쳐서 조선미이출통제간담회라는 것이 개최되었던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이다. 먼저 동회의 구성인원을 보고 다음 동회에 제출된 간담사항을 보면 우리는 동회 소위 간담이라는 것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동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동회는 아옥(兒玉, 코마다) 정무총감이 이를 총재하고 그 외 총독부측을 대표하여 송촌(松村, 마츠무라) 식산국장과 관계 각 과장이 참석하게 되고 소위 민간위원으로는 총수 46명인데, ... 조선 내 중소기업 이하의 경제적으로 빈약한 다수농민, 환언하면 조선 전 농민 수의 9할 이상을 점령한 다수의 중소기업 이하의 농민의 의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그림자도 볼 수 없다. 첫째 이것만 보아도 동간담회가 조선 내 다수 농민의 이해관계와는 전연히 물고섭한 것임을 추측하기에 곤란치 아니하다.”³⁸⁾

선미옹호운동세력 조직에 대한 비판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조선농회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농회는 일본의 제국농회와 비교되며,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를 자처하면서도 그 행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거센 비판의 이유가 되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조선농회는 무엇하는게냐”라는 자극적이고 선명한 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조선농회를 목표로 하여 날선 비판을 했다. 이때에도 역시 조선농회라는 조직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었는데, 조선농회 주최의 ‘전조선농업자대회’는 사실상 지주 이외의 자소작농들은 참여하지 않는 대회이므로 대회명을 ‘전조선지주대

팔까 하는 데 있으니 그들의 모여서 토의하는 바가 농촌의 구제에 관심이 없을 것은 물론이요, 미가가 생산비 이하로 참락을 하거나 말거나 그들이 이윤을 얻는데 위험성만 없는 한에서 하등의 통양을 감치 않는 자요, 자본적 경제조직의 산물인 기생적 존재다. ... 미가대책이 미상분위로 되는 것만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나 ... 주최자인 총독 극물상연합회회장이 충북 내무부장이라 함에 있어서는 망연자실할 밖에 없다.”

<동아일보>, “경성상공회의소의 난맥.” (1931.01.30.) 이탤릭체 추가

“원래 상공회의소 혹은 개칭 전의 칭호대로 상업회의소라는 것은 그 성질상 실지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의 조사와 업무상 연락을 취하게 함에 있을 것이지만 금일 조선의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일종의 정상결탁의 기관이 되어가지고 일부 유회업자들의 어용, 이용의 기관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불문의 사실 ...”

38) <동아일보>, “미이출통제간담회.” (1930.03.11.) 이탤릭체 추가

회'로 변경하라는 조소 섞인 제안도 있을 만큼 조선농회는 사실상 농민은 배제된 단체였던 것이다.

“수이출운임문제 ... 필자는 이 계약체결에 대하여 생산자의 단체가 참가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농회는 생산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 참여하고 그것을 생산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이 계약이 헐고 비싸고 간에 생산자에게는 조금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상인들만이 벼를 살 때에 주판상에서 계산될 뿐이니 생산자로서는 이리도 죽고, 저리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³⁹⁾

“ ...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조선농회의 현상은 유약무의 정도를 지나서 도리어 불약무(不若無)의 수면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하고 오하면, 그 본질적 사명으로 보아, 농민의 이익을 대표한 기관이라야 될 것임에 불구하고, 하등 그러한 사명을 다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그렇지 않아도 부담과중으로 해태이는 다수의 농민을 경일층 더 괴롭게 하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하면, 조선농회는 유약무의 정도를 지나서 불약무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작년 이래로 지방에 농회무용론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방면의 곡절을 실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 ... 조선농회의 주축로 그 이름은 전조선지주대회라고 하나, 그 실, 회집명수로 보나, 협의내객으로 보나, 일종 형식적 선전적에 불과한 회합이 1차 있는 후에는 금일까지 약 반 년 동안에, 조선농회는 조선농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어떠한 사업을 행하였느냐 ... ”⁴⁰⁾

조선농회의 또 다른 문제는 관영단체적 성격이 짙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지주, 사회정치적으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농회를 이끌어갔다

39) <동아일보>, 엄성문, “수이출조선미 이면에 생산자 손실이 여차.” (1933.07.09.) 이탤릭체 추가

40) <동아일보>, “조선농회는 무엇하는게냐.” (1931.05.07.) 이탤릭체 추가

는 사실은 조선 농회에서 농민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했는지 짐작케 한다. 조선농회는 결국 선미옹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30년대 초반에는 민영기관으로서의 본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관영기관과 같다는 많은 비판에 부딪히며 1934년 이후 뒤늦게 민간기관으로 전향하였다.⁴¹⁾

“즉 조선농회는 사실상 총독부와 각도당국이 지도적지위에 있고 금정전(이마이다, 今井田)총감은 조선농회의 회장 각도농회장은 대부분 각도지사 또는 내무부장이 겸임하였으므로 이번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조선농회는 방관케 되고 기성회와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기성회의 발기인 중에 조선농회를 세민간기관으로 하고 금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 농회가 중심으로 되어 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농회개조론이 생긴다.”⁴²⁾

“농회는 순전한 민간의 기관으로 되어야만 ... 그러나 조선농회에 있어서는 표면으로 반관반민 이면에 있어서는 거의 관영의 기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르도록 조선농회는 민간과 간격이 있어 오던 바, 미곡통제문제로 조선 내에도 미곡연구회, 조선미옹호기성회 등이 생겨 조선미 차별대우에 반대운동을 하여오는 것은 조선농회가 순연한 민간의 기관이 못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종내 농회를 개조하자던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그 주장을 강경히 하는 까닭에 총독부 당국도 이 추세에 감하여 농회의 중추를 구성하는 통상의원(각도대표) 13명을 점차 민간으로부터 임명할 방침을 세우고 ...”⁴³⁾

이처럼 조선농회를 필두로 선미옹호운동단체가 조선 농민들을 전혀 대변 해주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응하여 농민 중심의 단체 설립이 필요

41) <동아일보>, “조선농회개조 점차 구체화.” (1934.03.21.),

“이 기회에 개조에 착수하여 순민간기관으로의 조선농회의 개조를 단행하고 ... ”

42) <동아일보>, “조선농회의 개조론 대두.” (1932.07.16.) 이탤릭체 추가

43) <동아일보>, “관영기관평 잇는 조선농회를 개조.” (1933.01.29.) 이탤릭체 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⁴⁴⁾

선미옹호운동세력에 대한 불만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이는 선미옹호운동 구성원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인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에는 ‘나라 잃은 설움’ 뉘앙스보다 민족이 경제적 계층의 또 다른 말이 된 느낌이 강하다. 농민이 적절히 대변되지 못하는 불만과 마찬가지로 선미옹호운동 단체들에서 조선인 구성원이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 곡물의 원산지로 수출고 많은 ... 미곡상의 증개와 곡물 위탁 판매 등은 전부 일본인의 경영으로 내려왔으나 ... ”⁴⁵⁾

“이를 민족별로 보면 일본인 민간위원이 34인이요 조선인민간위원은 겨우 11인 밖에 아니 된다.”⁴⁶⁾

“... 경성상공회의소가 경성의 조선인상공업자를 위하여 열만한 공적이 있는가 함에 있어 들리는 말은 상의에 대한 비난의 소리 목도하는 바는 조선인상공업자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몰교섭한 것뿐이다. ... 조선인 상의 의원 단 7명이 있다는 것이 경성상의로서 변명의 거리를 삼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의원의 단 7명만으로서 조선인 상공업발달 개선케 하는 것이라고는 말 못할 것이다. 경성 상의에 대하여 조선인 상공업자는 전부터 불만이 많은 터이다. 오늘까지 경성상의로서 조선인 상공업자를 위하여 한 일은 한 번도 없다. ... 상공회의소는 영리단체가 아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주수의

44) <삼천리> 제4권 제2호,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표현단체의 필요.” (1932.02.01.)
“이제 당래(當來)할 표현단체는 이 추세에 대응할 농민문제와 토지문제의 해결을 제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면 안될 줄 안다.”

<삼천리> 제5권 제1호, “1933년과 조선농촌.” (1933.01.01.)

“토지문제를 일반 대중적으로 해결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요. ... 우리들로서는 농민의 운동을 ... ”

45) <동아일보>, “강경 미곡위판조합 설치준비.” (1931.10.24.)

46) <동아일보>, “미이출통제간담회.” (1930.03.11.) 이탤릭체 추가

다과로서 세력의 우열을 결하는 곳이 아닌 만큼 공평을 주안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바이다. 그런데 경성상의의 직원 수를 보면 영리 회사이상으로 부과세금의 표준 하에서 너무 불공평하다. 이에 대하여 긴말을 피하거니와 조선인 직원은 단 한사람인 것을 보아서 얼마나 등한함을 알 수가 있다. ... ”47)

현재까지 선미옹호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 중 특징적인 것은 일제시기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이분법적 구조를 탈피하여, 즉 민족 구분을 넘어서 ‘조선 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시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것인데 대중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선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계, 특히 선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연한 프레임이 되어 왔다. 선미옹호운동이 식민지 모국의 경제정책을 막아낸 ‘전조선’의 일치단결적인 정치행위였다는 서술은 공간적인 특성을 포착하며 (의도적이지 않았음에도) 그밖에 특징이 잊혀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선 거주자로서의 동일한 정체성 확립 이전 단계의 경제적 괴리, 민족적 괴리가 근원에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선미옹호운동 과정이 농민층과 조선인에 대한 철저한 배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조선 농민들의 강한 불만 표출은 무시하지 못할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내용으로나 조직 구성으로나 선미옹호운동세력은 관료를 포함하여 지주 등 경제 상층부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재조일본인의 이해관계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발화 내용(조선 농촌, 농민을 위함이라는)과 운동 내용이나 그 실상은 전혀 다르게 펼쳐졌다.

47) <동아일보>, “경성상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 (1933.08.15.)

V. 결론

본 연구는 과거 사건들의 단순한 나열 혹은 파편적인 지식의 획득이 아닌, 일제시기에 대한 보다 입체적·총체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사상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을 분석하였다. 1920-30년대의 선미옹호운동세력 분석은 당시 농민이 전 국민의 80%에 달하는 농업국가였던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농업정책, 그리고 농업정책의 최대 목표였던 일본으로의 이출에 관련하여 당대 사람들의 가장 직접적, 노골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일제시기, 식민지 조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간 일제시기 미곡정책이라는 연구 범주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한 조명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선미옹호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선미옹호운동의 전개양상이 주로 다루어지며, 실질적인 행위자들은 ‘재조일본인’이라는 대명사로만 등장해왔다. 재조일본인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선미옹호운동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미옹호운동의 구체적인 행위자와 실제 모습을 알아봄을 통해 선미옹호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선미옹호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일곱 개 단체들의 주요 인물들의 명단 및 약력을 정리하여 간단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선미이출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집단인 조선 농민들의 눈에 비친 선미옹호운동세력을 알아봄으로써 대상의 내부적 특성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포착하려 했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은 일본 정부의 선미이출입 제한에 반대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단체행동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벌였던 각종 집단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선미옹호운동세력의 주요 인물들 중 약 80%가 재조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약 20%의 조선인도 조선총독부 관료이거나, 일본의 귀족 지위가 있거나, 대지주, 혹은 거상으로서, 당시의 시각으로 일반적인 ‘조선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단체들이 민간설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에서 주요 인물들의 공직 참여 경험이 높았으며, 미곡이나 토지 관련한 사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각종 상인들이 많았다. 또한, 단체들이 연합회의를 하거나 복수의 단체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도 여럿 있는 등의 사실은, 일치단결에서 나오는 선미옹호운동세력의 거대한 영향력이 식민지 모국에서 정책적 양보를 이끌어냈음을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적 행보에서 사용하였던 제국주의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수사, 즉 선미이출입 제한이 초래할 조선 농민들의 고통과 그로 인한 조선 통치상의 불안정은 일면 옳은 부분이 있지만, 반쪽짜리 사실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이 제시한 월별이출제나 미곡창고의 실시는 사실상 조선 농민의 실생활과는 괴리된 정책이었고, 대지주나 미곡상 이상의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그 중에서도 재조일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도움이 될 뿐이었다.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며 모국의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선미옹호운동세력은 경제보다는 정치의 영역의 행위자로 파악되기 쉽지만,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성격이었다. 재조일본인을 브로커에 비유하여 이윤지향적 심성을 강조했던 우치다 준(Jun Uchida 2011)과도 상통한다.

그동안의 평면적이고 단순화되었던 일제시기 연구를 입체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의 중간과정에 머물러있는 듯한 인상을 지니는 선미옹호운동연구는 이제 선미옹호운동과 일제시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선미옹호운동 연구를 통하여 재조일본인이라는 행위자가 주목받고 당시 일본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영역이 넓혀져 왔다면, 선미옹호운동에 참여한 유형(有形)의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및 조선인과 선미옹호운동세력의 관계에 대한 집중은 기존 바탕 위에 보다 더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동아일보>

<동광>

<별건곤>

<삼천리>

『경성시민명감』

『대륙자유평론 사업인물호 제8』

『반도관재인물평론』

『사업과 향인 제1집』

『시정25년 기념 약진지 조선 부 재계인물전』

『왜정시대인물사료』

『재조선내지인 신사명감』

『조선공로자명감』

『조선의 인물과 사업-호남편 제1집』

『조선인사홍신록』

『조선총독부시정 25주년 기념 표창자 명감』

『함경남도 사업과 인물명감』

기유정. 2009. “식민지 對 모국 간 경제마찰과 재조일본인 사회의 대응: 1929-1936년 ‘선미옹호운동’의 정치학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Vol.82

_____. 2011 a.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지역의식의 정치효과: 1920년대 조선재정에 대한 일본인 상업자들의 정책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4

_____. 2011 b.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재조선일본인 정책 연구: 속지

- 주의와 속인적 분리주의의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Vol.20 No.3
- _____. 2011 c. “일본인 식민사회의 정치활동과 조선주의에 관한 연구: 1936년 이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근수. 1992.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 김민화. 2016. “1930년대 부산미곡취인소의 설립과 활동.”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영모. 1971. “日帝時 大地主의 社會的背景과 移動.” 『아세아연구』 제 14집
- 김제정. 2009.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 경제관료의 ‘지역으로서의 조선’ 인식.” 『역사문제연구』 제22호
- 김종식. 2007. 『192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 제이앤씨.
- 송규진. 2002. “일제하 식민지자본주의와 조선무역 -식민지적 미곡무역구조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12호
- 오승용. 2011. “식민지 정책과 국가자율성 문제-관세정책과 미곡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Vol.89
- 오카 요시타케. 1996. 『근대일본정치사』, 소화.
- 오호성. 2013. 『일제 강점기 미곡시장과 유통구조』, 경인문화사.
- 윤덕영. 2010.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 변화와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 _____. 2011. “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와 동아일보 계열의 비판.” 『대동문화연구』 Vol.73
- 이규수. 2013.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태.” 『역사교육』 Vol. 125
- 이준식. 2005.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동방학지』 131집
- 이형식. 2013 a. 『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 보고서.
- _____. 2013 b.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권
- 이혜인. 2014.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설립과 확장.”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전강수. 1993.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 -1930-45년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전상숙. 2012. 『조선총독정치연구』, 지식산업사.

전성현. 2011. 『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 선인.

최덕교. 2004.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Uchida, Jun. 2011.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오마이뉴스. “발빠른 한인들 ‘조선취인소’ 통해 축재.” 2002.12.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0019918>

한겨레. “권희영 “수출과 수탈이 무슨 차이인가”” 2015.10.15. 김원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부 록

[표 7] 선미옹호기성회 발기인 신상 (1)

	이름	민족	생년	학력	실업계-미곡, 토지 관련	실업계-은행, 보험, 증권	실업계-무역, 운수
1	가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日	1873			일본권업은행 이사 북해도척식은행은행장 조선은행 총재 중화회업은행 이사 조선금융제도조사회 위원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조선무역협회 회장
2	박영철 朴榮喆	朝	1879	동경 육군사관학교 졸업. 메이지대학에 서도 수학.	동양척식회사 감사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취체역	삼남은행 두취 조선상업은행 두취 조선신탁주식회사 취체역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 자문위원	
3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日	1873	동경법학원 영어법 률학과 졸업. 1년 간 미국 유학.	조선곡물상연합회 회장 선미협회 회장 미곡통제조사회 위원 미곡생산비조사회 위원	조선식산은행 이사, 두취(1919)	
4	야나베 에이사부로 矢鍋永三郎	日	1880	동경제국대학 법과 졸업		조선식산은행 감리관, 이사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회장	
5	마츠이 후사지로 松井房次郎	日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사장	조선금융제도조사회 위원	
6	미츠이 에이쵸우 三井榮長	日	1879	동경제국대학 농과 졸업	불이흥업주식회사 전무, 대표이사 장		
7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日	1872		길전미곡회사 창립 조선전분주식회사 창립, 이사 인천미두거래소 이사 주식회사 오전정미소 사장	원산상업은행 은행장 조선신탁주식회사 사장 조선화재보험 중역	인천 굴상회 조선우선주식회사 설립, 전무이 사 길전상회 창설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 사장 원산항일본인상업회의소 의원 인천상업회의소 의원		길전선박부 길전운수주식회사 설립(내국통 운회사와 합병) 국제통운주식회사 이사
8	한상룡 韓相龍	朝	1880	관립영어학교, 사립 성성학교 졸업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사무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사 농회 부회장 농업개량회사 창립발기인	한성은행 총무, 전무이사, 은행장 한성수형조합 평의원 한성농공은행 설립 사무 한국은행 설립 사무 조선식산은행 설립 사무 조선신탁주식회사 설립 사무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설립 사무 조선신탁주식회사 이사회장 식산은행 창립발기인 조선금융제도조사회 위원 조선생명보험회사 창립발기인, 부 회장, 사장 조선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창립 발기인, 이사 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 위원	
9	아키야마 미츠오 秋山滿夫	日	1888	인천미두취인소 영업과장, 지배인, 취제역	조선증권금융주식회사 감사역 주식회사조선취인소 상무이사	
10	쿠보 쿤이치 久保薰一	日	1889	동경제국대학 농과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상무취제 역, 상무	
11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日	1874	중화제분 창업, 사장, 이사 미곡상 경영 일본주양조업 제분공장 설립 재등합명회사 설립 조선곡물상협회연합회 간사장 사단법인 선미협회 고문		수출입무역
12	후나코시 미츠오 船越光雄	日	1884	동경농과대학 실과		
13	타부치 이사오	日	1888	장기고등상업학교	동양척식회사 경성부 지배인, 관	

田淵勳				동주 대운지점장, 동경본사 대부과장, 본사 감사과장, 본점 금융과장, 본점 업무부 금융주임, 이사 조선농회 고문 선미협회 고문	
-----	--	--	--	--	--

[표 8] 선미옹호기성회 발기인 신상 (2)

	이름	실업계-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등
1	가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경성상공회의소 특별의원	문관고등시험 합격 체신성(우편국장, 체신국장 등 역임)	선린상업학교 이사 조선공업협회 회장 조선토목협회 위원 조선철도협회 고문
2	박영철 朴榮喆	조선철도주식회사 취체역 조선맥주주식회사 취체역 경성상공회의소 특별의원	총독부 군수고등5등 한국시대 육군기병소좌, 사관학교교관, 혼성여단 참모관, 시종무관 등 익산군수, 함경북도 참여관, 전라북도 참여관, 강원도지사, 함경북도 지사 역임 경성부 교육회 부회장 경기도 국방의회 부회장	조선산림회 이사 조선사회사업협회 이사 조선방송협회 이사 동민회 부회장
3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일본고주파중공업 사장 조선제련 이사회장 경성상공회의소 특별의원	문관고등시험 합격 일본과 한국(任官, 長崎, 函館, 진남포)세관감시관 역임 통감부 재정감사관, 세관감사부장, 세무서장 총독부 재정감사관, 세관장, 세관국 서기관 경기도 내무부장, 도지부 이재과장, 칙임참사관, 조선은행 감리관 등 역임 귀족원 의원 농림성 미곡국 고문	조선잠사회 회두 조선금강산협회 부회장 조선국방의원연합회 회장 조선경마협회 회장 한강수력전기 사장 조선방송협회 부총재
4	야나베 에이사부로 矢鍋永三郎		문관고등시험 합격 통감부 서기관	

			공주재정감독국장, 경상남도 재무부장, 세관장, 관세과장, 참사관 등 황해도지사 1925년 퇴관	
5	마츠이 후사지로 松井房次郎		총독부 세관장 총독부 도사무관 함경남도지사	
6	미츠이 에이쵸우 三井榮長		농상무성 기수, 기사 조선총독부 식산국 농무과 기사(1938년 퇴관)	
7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조선철공소 조일양조주식회사 중역 길전창고주식회사 인천창고주식회사 사장 월미도유원주식회사 회장 조선인촌주식회사 이사 조선직물주식회사 이사 원산주조주식회사 상담역	인천부협의회원 경성도평의회원, 도회의원	중국: 교주염업공사 원산항민단 의원 인천부세진흥회 회장
8	한상룡 韓相龍	조선맥주주식회사 감사 조선제당 창립발기인 조선방직 창립발기인 동삼성실업공사 창립발기인 축산흥업 창립발기인 천연빙회사 창립발기인 서적인쇄 창립발기인 경성상업회의소 회장, 평의원, 부회장 경성상공회의소 특별의원	중추원 참의 경성상공회의소 특별의원 경성도시계획연구회 경제부장 부협의회원 도평의회원 경기도회 의원, 부회장 경기도교육회 부회장	산업조사회 위원 실업구락부 이사장, 사장 금강산전기철도 감사 삼립철도중앙철도 감사
9	아키야마 미츠오 秋山満夫		문관보통시험 대장성 전매국 서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서기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근무(1919 퇴관)	
10	쿠보 쿤이치 久保薫一	길부식산* 부원 대동사* 창설 동양축산흥업주식회사 취제역		사단법인조선경마구락부 이 사, 이사장 사단법인조선경마협회 이사

		경성축산주식회사 취제역		
11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인납 및 잡화상 개업 제사견직물공장 창업 기계소주제조공장		공업협회 상임이사
12	후나코시 미츠오 船越光雄		강원도 기수 종묘장 주임 (1917년까지의 문서)	조선산림회 이사
13	타부치 이사오 田淵勳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감사 만몽모직주식회사 취제역		조선송전회사 감사 조선신공보찬회 고문 조선방송협회 평의원 동척광업식식회사 사장

[표 9] 조선농회 임역원 개인 신상 (1)

	이름	지역/직위	민족	생년	학력	실업계-미곡, 토지관련	실업계-은행, 보험, 증권	실업계-무역, 운수
1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회장	日					
2	마츠이 후사지로 松井房次郎	부회장	日					
3	미츠이 에이초우 三井榮長	이사	日					
4	한상룡 韓相龍	부회장, 의장	朝					
5	후나코시 미츠오 船越光雄	전무이사	日					
6	타부치 이사오 田淵勳	고문	日					
7	코다마 히데오 兒玉秀雄	회장	日	1876	동경제국대학 법과			
8	이마이다 키요노리 今井田清徳	회장	日	1884	동경제국대학 법과 대학 정치과			
9	박영효 朴泳孝	부회장, 회장	朝	1861				
10	후지이 칸타로 藤井寛太郎	이사, 의장	日	1876 (1879)		전북 군산 전북농장 개설 임익수리조합 조합장 평북 용천군 서선농장 개설 대정수리조합 조합장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전무이사 익옥수리조합 조합장 불이흥업주식회사 초대사장		
11	유무라 湯村辰二郎	이사	日	1892	동경제국대학 법과 대 독법과			
12	유가와 마타오 湯川又夫	고문	日	1878	동경제국대학 농과 대학 농예화학과			

					농학박사			
13	민병석 閔丙奭	고문	朝	1858				
14	카다 나오지 賀田直治	고문	日	1877	동경제국대학 농과 대학, 박사 유럽과 미국 유학	賀田組 이사 조선근농주식회사 사장	조선권업주식회사	
15	와타나베 시노부 渡邊忍	고문	日	1883	동경제국대학 법과 대학 정치과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사		
16	타키 쿠메지로 多木桑次郎	고문 전북 고문	日	1858		多木농장장 주식회사 다목비료소 설립 동진수리조합 조합원		
17	코에즈카 쇼타 肥塚正太	평의원	日	1866	동경수의학교		동대문금융조합장	
18	多田榮吉	평의원	日	1879		평북곡물협회 회장 기계정미공장 창설 신의주미곡상 조합장 조선미곡상연합회 간사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참여	신의주무역주식회사 사장 대전상회 주인
19	유병의 劉柄義	함남대표	朝			함경남도농회 부회장 조선농회 통상의원	함흥금융조합 감사, 조합장 함흥신탁주식회사 이사 함흥무진주식회사 이사	
20	하라다 테츠사쿠 原田鐵策	평남대표	日	1871	장기(長崎) Mission School			
21	김한규 漢圭		朝	1874 (1877)			조선상업은행 감사 한성상업회의소 부회장 광장회사 이사, 사장 한일은행 전무이사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감사 조선식산은행 상담역	
22	하시모토 토요타로 橋本豊太郎		日	1868				

23	이규완 李圭完		朝	1862 (1863)	육군호산학교			
24	히우라 히로지 日浦宏治		日	1884		농림업 경영 안강수리조합 조합장 토좌흥농주식회사		
25	아이사와 쇼조 相澤長三		日	1884	동경제국대학 농과 대학	조선흥업주식회사 목포관리소장, 항해지점 지배인 조선농회 통상의원 황해도농회 특별의원 황주농회 부회장		
26	텐니치 쓰네지로 天日常次郎		日	18??		천일정미소 사장 (인천, 군산 등 에 지점 설치) 조선연초 감사	실업은행 감사 인천거래소 감사 경성주식취인소 전문	
27	요시다 吉田清三		日			송정수리조합		
28	오오쿠보 시게오 大久保繁雄	이사	日					삼릉상사 경성지점장
29	코바야시 쇼타로 小林証太郎		日					
30	토미다 가토 富田加藤		日					
31	윤치호		朝					
32	오가와 미츠이 小川三井		日					
33	中屋堯駿		日					
34	足立		日					
35	石原		日					

[표 10] 조선농회 임역원 개인 신상 (2)

	이름	실업계-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등
1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2	마츠이 후사지로 松井房次郎			
3	미츠이 에이쵸우 三井榮長			
4	한상룡 韓相龍			
5	후나코시 미츠오 船越光雄			
6	타부치 이사오 田淵勳			
7	코다마 히데오 兒玉秀雄		대장성 서기관 내각 서기관장 상훈국 총재 귀족원 관동관장 척무대신 조선: 통감부 서기관, 총독부 총무국장, 정무총감	
8	이마이다 키요노리 今井清徳		문관고등시험 통신사무관 대판중앙우편국장 신호체신관리국 총무부장 동경체신국 규격과장 체신서기관 체신국 전화과장, 서무과장 능본체신국장 간이보험국장 저금국장 대판시전기국장	

			체신차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9	박영효 朴泳孝		내무대신, 궁내대신 후작 총독부 중추원 고문, 부의장 귀족원 의원 후작	
10	후지이 칸타로 藤井寛太郎			군산전기회사 감사역
11	유무라 湯村辰二郎		문관고등시험 총독부 시보, 회계과장 사무관, 토지개량과장, 개간과장, 농무과장, 농산과장 충청북도 내무부장 함경남도 도지사	
12	유가와 마타오 湯川又夫		총독부 농사시험장장	동경제국대학 조교수 수원고농 교장 구주제국대학 교수
13	민병석 閔丙奭		문과 급제 규장각 직학, 승정원 부승지, 홍문관 부제학, 성균관 대 사성, 승정원 도승지, 등 총독부 중추원 고문	
14	카다 나오지 賀田直治	조선피혁주식회사 사장 조선철도주식회사 이사 동양축산농업주식회사 이사 조선자동차주식회사 감사 공영자동차주식회사 감사 경성상공회의소 회두 조선상공회의소 회두	대만총독부 식산국	조선산림회 회장 민유림갱생회 회장 조선물산협회 회장 국제친화회 부회장
15	와타나베 시노부 渡邊忍		내무부 교육과장, 상공과장 총독부 도사무관, 충청북도 제일부장 황해도 내무부장, 평안남도 내무부장 전라북도 지사 경기도 지사	

			식산국장, 산림부장 농림국장	
16	타키 쿠메지로 多木 桑次郎	국유임야 불하, 식림사업 종사	귀족원 의원	
17	코에즈카 쇼타 肥塚 正太	조선축산주식회사 설립, 사장 동아목장 경용유유판매소 건설, 전무이사 경성가축주식회사 사장 조선축산협회 상무이사	경성부 협의회원 경기도회 의원	경성신사 총대 경성학교조합회 의원 경성교화단체연합회 상무이사
18	多田 榮吉	대림조제재소장 신의주수산주식회사 사장 일본목재업연합회 이사 신의주목재상조합 조합장 조선수산협회 이사 주식회사 압록강운선공사 설립, 사 장	평안북도도회 의원, 부의장 학교조합의원 민선 부협의회원 신의주부회 부의장 신의주상공회의소 특별평의원 신의주거류민단 의원 지방토지조사위원	국경매일신문사 사장 재향군인후원회 평의원 신의주재향군인분회 부회장 국민비행협회지부 이사 조선교육회 대의원 조선산림회 평의원 다사도축항기성동맹회 회장 삭주온천 경영
19	유병의 劉柄義	함흥상공회의소 특별위원	도평의회원 부회의원	함흥제일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함경남도교육회 간사
20	하라다 테츠사쿠 原田鐵策	사금광, 수산업 경영 진남포상업회의소 회두	진남포부협의회 의원	진남포거류민단 단장 진남포민회 의장 각국거류지회 의원
21	김한규 金漢圭	경성유흥회사 감사 경성가축회사 이사 경성상공회의소 부회두	경기도 평의원 중추원 부찬의 조선총독부 참의	외국어학교 부교관 중학교 교관 한성일어학교 교관 조선미술품제작소 조선국방협회 부회장
22	하시모토 토요타로 橋本豊太郎		외무부 서기관 통감부 이사청 진남포 부윤	
23	이규완 李圭完		경무청 경무부사 강원도 관찰사 중의원 찬의	일본적십자사 한국본부 춘천지점 부장 춘천실업학교 교장

			강원도 장관	
24	히우라 히로지 日浦宏治			
25	아이사와 쇼조 相澤長三			
26	텐니치 쓰네지로 天日常次郎	상업회의소 평의원		경성거류민단 의원(1913)
27	요시다 吉田清三			
28	오오쿠보 시게오 大久保繁雄			
29	코바야시 쇼타로 小林証太郎	美古都상점 주식회사	공주면장 공주경찰서장	

[표 11] 조선곡물상연합회 임역원 개인 신상 (1)

	이름	지역/ 직업	민족	생년	학력	실업계-미곡, 토지관련	실업계-은행, 보험, 증권	실업계-무역, 운수
1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회장	日			○	○	
2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간사장	日			○		○
3	텐니치 쓰네지로 天日常次郎	간사장	日			○	○	
4	카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郎	인천	日	1881		합자회사 가등정미소 조직, 대표사원 가등식산주식회사 설립, 사장 인천곡물협회 회장 인천, 진남포, 부산에서 정미 공장 운영		
5	하마사키 키사부로 濱崎喜三郎	대구 조합장	日	1873		대구곡물주식회사 설립 전무, 사장		대구취인소 이사장 대구상공회의소 의원
6	츠지카와 토미시게 辻川富重	인천	日	1882		정미업 인천미두취인소중매인조합 인천곡물상협회 부협회장 선미협회		
7	松浦齊生	경성 조합장	日	1888		곡물상 경영		무역상
8	이봉렬 李鳳烈	경성 평의원	朝	1892	고등보통학교 졸업	한강정미소 경영		
9	김광준 金光準	경성 부조합장	朝	1887		정미소 경영	남대문금융조합 평의원	무역상 운영
10	森田泰吉	목포 조합장	日			목포곡물상조합 조합장		
11	토요키치 시게이치 富吉繁一	부산	日	1889		富吉상점 사장 부산미곡조합 평의원		무역상 운영

						미곡취인소 간사	
12	大池忠助	부산 조합장	日	1856		곡물수출상조합 조합장	부산기선주식회사 창립, 중역
13	五島誠助	부산 부회장	日	1887		부산곡물수이출조합 조합장 부산미곡취인소 상무이사 소화토지건물주식회사 사장	남조선신탁주식회사 감사역
14	김문옥 金文玉	목포 서기관	朝	1896	목포간이상업 고등학교 졸업	대성상회 경영	
15	油谷保三	목포 이사	日				
16	森井	목포 고문	日				

[표 12] 조선곡물상연합회 임역원 개인 신상 (2)

	이름	실업계-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등
1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	○	○
2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		○
3	텐니치 쓰네지로 天日常次郎	○		○
4	카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郎			
5	하마사키 키사부로 濱崎喜三郎	익명조합대정상회		대구일보 사장 대구거류민단 의원 삼주인회(三州人會) 회장
6	츠지카와 토미시게 辻川富重	익명조합대정 주식회사 상무이사		

7	松浦齊生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8	이봉렬 李鳳烈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기도회 의원 경성부 한남정 총대	한강공립보통학교 후원회장
9	김광준 金光準			
10	森田泰吉	목포상공회의소 회두		
11	토요키치 시게이치 富吉繁一	부산상업회의소 의원		
12	大池忠助	부산전등주식회사 조직, 사장 부산해산물조합 조합장 부산궤도주식회사 창립, 중역 부산상업회의소 회장		부산거류민 회장
13	五島誠助	부산상업회의소 부회장		
14	김문옥 金文玉			
15	油谷保三	목포상공회의소 서기장, 이사	목포부 근무	

[표 13] 상업창고 발기인 신상 (1)

	이름	지역	민족	생년	학력	실업계-미곡, 토지관련	실업계-은행, 보험, 증권 등
1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경성	日			○	○
2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인천	日			○	○
3	한상룡 韓相龍	경성	朝			○	○
4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경성	日			○	
5	후지이 칸타로 藤井寛太郎	경성	日			○	
6	아이사와 초조 相澤長三	황해	日			○	
7	와다 이치로 和田一郎	경성	日	1881	동경제국대학 법과대 정치과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원 재정학 법학박사		조선은행 감독관 식산은행 감독관 식산은행,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완성 조선상업은행 두취
8	민대식 閔大植	경성	朝			조선토지개량회사 취제역, 이사	조선신탁회사 취제역, 이사 한일은행 이사 동일은행 은행장
9	사와다 토요타케 沢田豊文	경성	日	1881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10	와타나베 테이이치로 渡邊定一郎	경성	日	1872		삼좌농장 지배인 황해사 지배인, 전무취제역, 취제 역사장 장강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장 선만개척주식회사 경성지점장 남만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장	
11	이시하라 이소지로 石原磯次郎	경성	日	1865 (1864)		시흥군에서 과수 재배 이천군 개척, 수리조합 설립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 감사	
12	아라이 하츠타로 荒井初太郎	인천	日	1868		조선정미회사 인천미두취인소 소장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 사장	조선취인소 이사장
13	우치다니 만페이 内谷萬平	전남	日	1881		목포에서 무역 및 정미소 경영 목포미곡취인소 조직, 이사장	
14	무라카미 나오키 村上直助	전남	日	1875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발기인	
15	이타니 기사부로 井谷義三郎	경남	日	1876		부산정미업 간사장 선미협회 간사 소화토지건물회사 취제역 부산미곡취인소 이사장 곡물상조합 조합장	
16	박상준 朴相駿	평남	朝	1877			
17	타치카와 로쿠로 立川六郎	평남	日			진남포 창고회사 지배인 조선미창 전무	
18	강철모 姜哲模	함남	朝	1881	북청실업학교	임자동산미개량조합 조합장	경덕금융조합 조합장
19	아사카와 마사 淺川眞砂	경성	日				
20	川慘種一郎	평남	日				
21	박선양 朴善陽	강원	朝				
22	스기노 타이치 杉野太市	함남	日				
23	카토 케이이치로 加藤敬一郎	경성	日				
24	마츠바라 준이치로 松原純一郎	경성	日				
25	上田忍	인천	日				

26	中屋堯駿	인천	日			
27	김상섭 金商燮	전남	朝			
28	濱崎喜一郎	경북	日			
29	日照銀次	경남	日			
30	愛甲定郎	경남	日			

[표 14] 상업창고 발기인 신상 (2)

	이름	실업계-무역, 운수	실업계-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1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	○	○
2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	○	○	○
3	한상룡 韓相龍		○	○	○
4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	○		○
5	후지이 칸타로 藤井寛太郎				○
6	아이사와 쇼조 相澤長三				
7	와다 이치로 和田一郎			대장성 세무감독국 문관고등시험 세무감독국 사무관 업무국 사무관 금택세무감독국장	사립법정대학 회계법 강의

				대장성 서기관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서기관, 총 무과장 총독부 서기관 도지부 이재과장 철도부장 참사관 겸 감찰관 재무국장	
8	민대식 閔大植		조선맥주주식회사 이사 상공회의소 부대표	경기도평의회원 조선금융제도조사회 위원	경성전기회사 감사역
9	사와다 토요타케 沢田豊丈			문관고등시험 동경부속 근무 내무성속 산형현 사무관 총독부 서기관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장 토지조사위원 공진회 위원 판임관견습강습회 강사 총독부 내무국 제일과장 총독부 감찰관	
10	와타나베 테이이치로 渡邊定一郎		경성요업주식회사 감사역 경성상공회의소 회두		국수회 조선지부장 조선토목건축협회 이사 경성토목건축협회 상담역
11	이시하라 이소지로 石原磯次郎		경성상공조합연합회	경성부관선부협의회회원 경성부 용산교화구위원장 경기도 관선도회의원	실업친화회 조직 사립신용산유치원 설립 용산신용조합 설립 창덕가정여학교 설립
12	아라이 하츠타로 荒井初太郎	복육기선회사	황정조 (토목회사) 창립 용산공작회사 조선화약총포회사 OOO합명회사 화태임업회사		조선토목건축협회 회장 조선건축회 이사 조선광업회 이사 조선축산회 부회장 조선경마구락부 회장
13	우치다니 만페이		전남면화주식회사 설립, 사장		

	內谷萬平		인납공장 설치 목축업 목포제빙주식회사 사장		
14	무라카미 나오키 村上直助	항운회사 설립	수입잡화점 경영 목포전등주식회사 설립, 중역 목포상공회의소 회원, 부회장, 회두	전라남도 도회 의원 목포부회 의원	조선면업공진회 조직, 이사장 전라남도물산공진회 조직, 이사장
15	이타니 기사부로 井谷義三郎		대판오백정상점 부산지점 지배인 가마니회사 사장 상공회의소 특별의원		
16	박상준 朴相駿			금성전보사 주사 은산전보사 주사 평안남도 강동군수, 순천군수, 평원 군수 평안남도 참여관 강원도지사 함경북도지사 황해도지사 총독부 중추원 참의	성천군사립동명학교 교감
17	타치카와 로쿠로 立川六郎			진남포 세관장	
18	강철모 姜哲模			함경남도 도회 의원 군농회 통상의원	북청군 축산동업협동조합 평의원 임자동수리조합 조합장
19	아사카와 마사 淺川眞砂			조선금융제도조사회	

[표 15] 조선미곡창고 발기인 신상 (1)

	이름	지역	민족	생년	학력	실업계-미곡, 토지관련	실업계-은행, 보험, 증권	실업계-무역, 운수
1	카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경성	일본인				○	○
2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경성	일본인			○	○	
3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인천	일본인			○	○	○
4	한상룡 韓相龍	경성	조선인			○	○	
5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경성	일본인			○		○
6	후지이 칸타로 藤井寛太郎	경성	일본인			○		
7	아이사와 초조 相澤長三	해주	일본인			○		
8	카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郎	인천	일본인			○		
9	와다 이치로 和田一郎	경성	일본인				○	
10	민대식 閔大植	경성	조선인			○	○	
11	사와다 토요타케 沢田豊丈	경성	일본인					
12	와타나베 테이이치로 渡邊定一郎	경성	일본인			○		
13	이시하라 이소지로 石原磯次郎	인천	일본인			○		
14	아라이 하츠타로 荒井初太郎	경성	일본인			○	○	○

15	우치다니 만페이 内谷萬平	목포	일본인			○		
16	무라카미 나오스케 村上直助	목포	일본인			○		○
17	이타니 기사부로 井谷義三郎	부산	일본인			○		
18	타치카와 로쿠로 立川六郎	진남포	일본인			○		
19	강철모 姜哲模	함흥	조선인			○	○	
20	아사카와 마사 淺川眞砂	경성	일본인					
21	松原純一	경성	일본인	1884	신호고등 상업학교		제일은행 한국은행 조선은행 지배인, 이사, 부총재 만주흥은 총재	
22	오오다 시노부 太田忍	인천	일본인	1877				대판상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조선운송주식회사 인천지점 장, 이사
23	메구로 긴지 目黒銀次	부산	일본인	1879		조선흥업주식회사 서무계장, 주임, 지배인, 이사		
24	愛甲卯八郎	부산	일본인			미곡창고회사 지점장		
25	구로즈미 이타로 黒住猪太郎	목포	일본인	1873		목포에서 농업 종사 전남중앙영농자조합 조합장 전남지방조사위원 지주회 평의원 조선농회 평의원 전남농회 부회장		
26	하마사키 키사부로 濱崎喜三郎	대구	일본인	1873		경산에서 미곡상 경영 익명조합대정상회 조직, 상무이사 대구곡물주식회사 설립, 전무, 사장		

27	이종섭 李鐘燮	진남포	조선인			미곡 및 정미업자	
28	모리 기쿠고로 森菊五郎	군산	일본인	1876		군산미곡거래소 이사장 조선미곡참고주식회사 이사 군산미곡취인소 이사장 삼국농장	조선신탁주식회사 이사
29	하시모토 나카바 橋本央	김제	일본인	1865		군산항에서 무역업, 정미업 김제군에서 농장 경영 김제군농회 부회장 전라북도농회 평의원, 통상의원 금강토지건물주식회사 사장	군산상인동맹회 회장
30	스기노 타이치 杉野太市	원산	일본인				
31	김상섭 金商燮	목포	조선인				
32	박보양 朴普陽	철원	조선인				
33	中屋堯驍	수원	일본인				

[표 16] 조선미곡참고 발기인 신상 (2)

	이름	실업계-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등
1	카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	○	○
2	아루가 미츠토요 有賀光豊	○	○	○
3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	○	○
4	한상룡	○	○	○

	韓相龍			
5	사이토 히사타로 齋藤久太郎	○		○
6	후지이 칸타로 藤井寛太郎			○
7	아이사와 쇼조 相澤長三			
8	카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郎			
9	와다 이치로 和田一郎		○	○
10	민대식 閔大植	○	○	○
11	사와다 토요타케 沢田豊丈		○	
12	와타나베 테이이치로 渡邊定一郎	○		○
13	이시하라 이소지로 石原磯次郎	○	○	○
14	아라이 하츠타로 荒井初太郎	○		○
15	우치다니 만페이 内谷萬平	○		
16	무라카미 나오키 村上直助	○	○	○
17	이타니 기사부로 井谷義三郎	○		
18	타치카와 로쿠로 立川六郎		○	
19	강철모 姜哲模		○	○

20	아사카와 마사 淺川眞砂		○	
21	松原純一			
22	오오다 시노부 太田忍	인천 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선총독부 운수위원	조선해사회 인천지부 선박급수부장
23	메구로 긴지 目黒銀次			
24	愛甲卯八郎			
25	구로즈미 이타로 黒住猪太郎	전남가마니제조판매조합 조직, 조합장 조선가마니주식회사 창립, 사장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 감사역 수리조합 조합장	전라남도 평의원	영산포학교조합 관리자
26	하마사키 키사부로 濱崎喜三郎	대구상공회의소 의원		대구거류민단 의원 대구일보 사장
27	이종섭 李鐘燮	진남포부 상공회의소 특별위원, 회장	진남포부 의원, 부의장	
28	모리 기쿠고로 森菊五郎	삼국상점 점주 군산상공회의소 특별의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군산부의회 의원	조선화재회사 학교조합 의원
29	하시모토 나카바 橋本央	전북축산주식회사 이사 군산상업회의소 의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군산부의회 의원	김제학교조합 관리자 김제교육회 회장 김제명예읍장 동진수리조합 상설위원 군산각국거류지회 의원 군산소방조 부조장 군산축항수도기성동맹회 회장 조선소방협회 전북지부 지부장 적십자 김제분구 분구장 김제국방의회 회장 제국비행협회김제지방 위원장 조선신궁봉찬회 전북지부 위원

[표 17] 조선상공회의소 주요 인물 신상 (1)

	이름	지역/직위	민족	생년	학력	실업계-미곡, 토지 관련	실업계-은행, 보험, 증권 등
1	가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부회두	日				○
2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인천 회두 조선상공회의소 부회두	日			○	○
3	카다 나오지 賀田直治	경성 1급의원 조선상공회의소 대표	日			○	○
4	무라카미 나오키 村上直助	목포곡물상조합 회두	日			○	
5	오오다 시노부 太田忍	인천 의원 미곡창고	日				
6	이종섭 李鐘燮	진남포 회두	朝				
7	진나이 시게요시 陳內茂吉	조선상공회의소 회두	日	1873			신용산금융조합 조직, 조합장
8	다가와 조지로 田川常治郎	조선상공회의소 이사	日	1884			
9	백완혁 白完赫	조선상공회의소 이사	朝	1856		동양척식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장 천일은행 조선상업은행 한일은행 한성은행 한국은행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 조선화재보험주식회사
10	이토	조선상공회의소	日	1882	메이지대학 졸업	正懿. 正愨.	

	伊藤正懿	이사					
11	쇼잔 이쿠지로 象山郁次郎	조선상공회의소 부회두	日	1886	山口고등상업학교 졸업	곡물상조합 이사	경상남도 하동 금융조합 이사 대동은행 지배인 진남포무진주식회사 이사
12	우에 키치조 宇惠吉藏	인천 의원	日	1886			
13	代田繁治	인천 의원	日	1881			
14	이마이 카조우 今井嘉三	인천 의원	日	1880		곡물무역업 인천곡물협회 부회장	
15	나가이 후사요시 永井房吉	인천 의원	日			미두취인소	
16	카아이 시사부로 河合治三郎	경성 1급의원	日	1874	일본법률학교		
17	야마모토 山本正三	경성 1급의원	日	1868			
18	타카이 타키사부로 高居瀧三郎	경성 1급의원	日	1881			
19	와타나베 소우지 渡邊惣次	경성 1급의원	日	1881			
20	토시마 유우지로 戸島祐次郎	경성 1급의원	日	1883			
21	타나카 사부로 田中三郎	경성 1급의원	日	1890	중앙대학 영법과 졸업	경성미곡물신탁 주식회사 감사역	동경화재보험회사 근무
22	후지사다 이치 藤貞市	경성 1급의원	日	1889			
23	우치야마 칸쇼우 内山寛正	경성 1급의원	日	1894			
24	원덕상 元惠常	경성 1급의원	朝	1883			조선생명보험회사 전무취체역 서울종로금융조합 조합장 금융조합연합회 감사
25	박영근	경성 1급의원	朝	1887		경성식산사 취체역 사장	남대문금융조합 감사

	朴永根					
26	츠즈쿠 都筑康二	경성 1급의원	日	1883		남미창정회 상담역
27	후지타 요네사부로 藤田米三郎	경성 1급의원	日	1879		공제무진회사 감사역
28	히라이 쿠마사부로 平井熊三郎	경성 1급의원	日	1874		조선권업신탁 주식회사 전무 취 체역 봉천거래소 감사역 경성거래소 감사역 경성창고금융 감사역
29	이동선 李東善	경성 1급의원	朝			
30	성명신 成明信	경성 2급의원	朝	1887		남대문금융조합 평의원
31	마츠라 松浦齊生	경성 2급의원	日	1888		쌀,잡곡상 경영
32	요시오카 吉岡定次郎	경성 2급의원	日	1886		
33	야마모토 소우자부로 山本惣三郎	경성 2급의원	日			
34	마츠모토 키요지로 松本清次郎	경성 2급의원	日			
35	후지노 토시오 藤野敏夫	경성 2급의원	日	1891		
36	와타나베 기이치 渡邊儀一	경성 2급의원	日	1884		
37	니노미야 츠네이치 二宮常一	경성 2급의원	日	1885		
38	우에니시 겐고로 植西源五郎	경성 2급의원	日	1885		

39	다무라 사쿠로 田村作郎	경성 2급의원	日	1880		
40	세키네 킨사쿠 關根金作	경성 2급의원	日	1878		
41	무구라 타케노스케 小倉武之助	대구 회두	日	1870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독법과 졸업	상공은행 두취 대구증권회사 사장
42	노부타 信田泰一郎	함흥 좌장	日	1888	동양협회전문학교 졸업	함흥무진 주식회사 사장 함흥신탁회사 설립, 사장 함흥토지금융회사 사장
43	장윤하 張潤河	함흥 설립위원	朝			함흥무진 주식회사 이사 함남무진 주식회사 이사
44	고지영 高志英	함흥 설립위원	朝			북선상업은행 주식회사 감사
45	타카쿠라 에이타로 高倉榮太郎	함흥 설립위원	日			
46	황항식 黃恒植	함흥 설립위원	朝	1891		함흥상공회의소 의원
47	키무라 시게키 木村重樹	함흥 설립위원	日	1885	동경제국대학 법과 정 치학부 졸업	
48	김석현 金錫炫	함흥 설립위원	朝	1892	동진학교 졸업	
49	카지타 梶田喜代八	함흥 설립위원	日			함흥토지금융 주식회사 이사
50	김수근 金秀根		朝	1892		
51	시오카와 鹽川濟吉		日	1882		한호농공은행 조선식산은행
52	히야마 檜山梅喜		日			조선상업은행
53	花岡鶴松	군산	日	1873		군산미곡상조합 조합장 花岡정미소

54	박고성 朴古城	부회두	朝			
55	타카이 高井	이사	日			
56	다나카 田中	이사	日			
57	최재환 崔在煥	경성 2급의원	朝			
58	조재구 趙載球	함흥 설립위원	朝			
59	정세택 鄭世澤	인천 의원	朝			
60	한영근 韓榮根	인천 의원	朝			
61	源見寅市	인천 의원	日			
62	도이 키시치 土居喜七	인천 의원	日			
63	요시키 吉木美介	인천 의원	日			
64	이규현 李珪鉉	인천 의원	朝			
65	곽만용 郭萬龍	인천 의원	朝			
66	김용규 金容奎	인천 의원	朝			
67	무라오 시게오 村尾重雄	인천 의원	日			
68	金	부산 부회두	?			
69	梶	군산 회두	?			
70	삼정길 森政吉	경성 2급의원	?			

[표 18] 조선상공회의소 주요 인물 신상 (2)

	이름	실업계-무역, 운수 등	실업계-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등
1	가토 게이사부로 加藤敬三郎	○	○	○	○
2	요시다 슈지로 吉田秀次郎	○	○	○	○
3	카다 나오지 賀田直治		○	○	○
4	무라카미 나오키 村上直助	○	○	○	○
5	오오다 시노부 太田忍	○	○	○	○
6	이종섭 李鐘燮		○	○	
7	진나이 시게요시 陳內茂吉		토목건설 청부업 철도공사전문 일만토목주식회사 창업, 중역 경성 상공회의소 회장		
8	다가와 조지로 田川常治郎	조선공업협회 창립, 부회장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부회두 용산공작주식회사 창립, 상무취체역 용화제지사 사장 소화상사회사 사장 동아산소회사 중역 중앙물산회사 중역		
9	백완혁 白完赫		정부참고 동양축산주식회사 이사 서선식산철도 감사 조선흥업철도 이사 경성상업회의소 상의원, 부회장, 회장		조선실업구락부 부회장
10	이토 伊藤正懿		경성상공회의소 이사 조선상공회의소 이사	조선총독부 이사관, 부윤	

11	쇼잔 이쿠지로 象山郁次郎	조선운송회사 주임	승입구매조합 이사 상공회의소 부회두		
12	우에 키치조 宇惠吉藏	화양잡화무역업	함자회사 옥식상점 사장 인천사상조합 부조합장		
13	代田繁治		간장도매상 인천물산주식회사 취제역 사장		
14	이마이 카조우 今井嘉三			경기산업주식회사 취제역사장	아동보호회 역원
15	나가이 후사요시 永井房吉	자영무역업	화장품 가게	인천부 의원	
16	카아이 시사부로 河合治三郎	국제운송주식회사 경성지점 장 승인운송점조합장 조선운수계산주식회사 사장 조선운송주식회사 창립		통감부 철도관리국 서기, 주사보 경성관리국 주임 만철평양운수사무소장 경성부회 의원	철도협회 이사
17	야마모토 山本正三		山本자동차상회 창립 국산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 변경, 전무 취제역 공영목관주식회사 취제역 山本여관 주인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18	타카이 타키사부로 高居瀧三郎		중앙활동사진 주식회사 감사역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상공연합회 부회장		조선유통업동맹회장 경성자동차업 조합장 경성사상연맹회 부회장
19	와타나베 소우지 渡邊惣次		渡邊조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20	토시마 유우지로 戸島祐次郎		嶋屋상점 점주 경성상업회의소 의원, 상업부장 경성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선양조품평회 심사원 조선무역협회 부회장
21	타나카 사부로 田中三郎		시계귀금속상 운영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취제역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부회 의원	경성시계귀금속상공조합 조합장

22	후지사다 이치 藤貞市		경성과자 주식회사 사장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상공연합회 상임간사		경성과자상조합 고문 경성도매상연맹회 상임간사 조선과자업조합 연합회장 조선과자도매업 협회장 조선무역협회 평의원 조선공업협회 평의원
23	우치야마 칸쇼우 内山寛正		山口약기상점 경영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24	원덕상 元惠常		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 경성상공회의소 부회두	경기도평의회원 경성부협의원 금융제도조사위원 중추원 참의	산림회 도시연구회 상임간사
25	박영근 朴永根		조선고무공업사 창립, 사장 경성식료품 주식회사 창립, 사장 조선원피즉매통제회사 창립, 사장 경성기업사 사장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부회두 경성상공연합회 상임간사	경성부 산업조사회 위원 도시계획연구회 위원	서울성남중학교 설립자, 이사 전기전력사용회 부회장 경기도고무조합 부조합장 정동공립보통학교 평의원 공업협회 상임이사
26	츠즈쿠 都筑康二	재단법인 조선무역협회 이 사	佐藤상점 주임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상공연합회 상임간사		경성사상동맹회 부회장 조선자전차사상조합 부조합장 경성백화연합 연합장 선린상업학교 운동부 후원회장 경성남대문공립소학교 후원회 이사 경성자전차업고물상조합 연합회장
27	후지타 요네사부로 藤田米三郎		용산수산업 주식회사 감사역 동양제약 주식회사 상담역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식료품사상조합 평의원
28	히라이 쿠마사부로 平井熊三郎		중앙물산 취체역 부사장 이주광산 취체역 경성상공회의소 부회두		경기도수산회 의원 조선물산협회 이사
29	이동선 李東善		조선매약회사 사장 조선한약주식회사 사장 합자회사 화평당약포		경성장훈학교 명예교장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30	성명신 成明信		해륙물산위탁업 개업 중앙물산 취체역 경성흥업주식회사 사장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남대문상인연합회장
31	마츠라 松浦齊生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곡물상조합 조합장
32	요시오카 吉岡定次郎		국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취체역 풍상사회사 사장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상공조합연합회 간사		경성잡화어조합장 조선아사학회 회장
33	야마모토 소우자부로 山本惣三郎		杵屋號사장 경인클럽특정품판매 주식회사 사장		
34	마츠모토 키요지로 松本清次郎		조선제과원료 주식회사 이사 적선식산 합명회사 松本제과		
35	후지노 토시오 藤野敏夫		조선화약총포 주식회사 상무취체역 경성운동구 상회 개업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36	와타나베 기이치 渡邊儀一		조선인쇄회사 입사 제사업 경영 경성상업회의소 의원	토지조사국 동양척식주식회사	
37	니노미야 츠네히치 二宮常一		경용청공조합장 동아출판 주식회사 중역 경성철공장 경영 경성상업회의소 의장		
38	우에니시 겐고로 植西源五郎		金滿屋 포목상 개업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39	다무라 사쿠로 田村作郎		貸座敷業 유흥업 개업		
40	세키네 킨사쿠	조만운수 상무감사역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왜성금융조합 평의원

	關根金作		경성상공연합회 상임간사		경성사상연맹회 상임간사 고물시장조합장 도구상조합장
41	무구라 타케노스케 小倉武之助		대흥전기회사 사장 대구전기주식회사 사장 대구 상공회의소 회두 남선험동전기주식회사 사장 북선험동전기주식회사 사장 조선전력 사장	도평의원 대구일본인회 평의원 경북도회 의원	대구거류민단 의원, 의장
42	노부타 信田秦一郎		함흥상공회의소 회두		함흥지방금융조합 이사 단천지방금융조합 이사 이원지방금융조합 이사 영변지방금융조합 이사
43	장윤하 張潤河	함흥시장 주식회사 이사 함흥상업참고 주식회사 사 장	동아상회 감사 함흥산업 감사 近森組 토목업 중역 함흥관 이사 조선화학유비공업소 사장 고원양조소 중역 태흥주조 중역 함흥토석판매 주식회사 이사 동명극장 사장 동해양주 이사 함남합동목재 주식회사 이사 함경승업 주식회사 이사 태양인쇄 주식회사 사장		
44	고지영 高志英	북선참고 주식회사 사장	함흥관 감사 함흥산업 주식회사 이사		
45	타카쿠라 에이타로 高倉榮太郎		함남상공주식회사 이사 함흥연초원매팔소 이사		
46	황항식 黃恒植		북선상업사 감사 동아상회 사장 함흥산업 주식회사 감사		함흥부학교비 평의원 함흥금융조합 평의원 함흥수리조합 평의원

					함흥산업조합 평의원 함흥상업회 부회장, 회장 함흥흥씨조합장 함흥면포상조합장
47	키무라 시게키 木村重樹				
48	김석현 金錫炫		함흥승업 주식회사 사장 조선고무공업 주식회사 이사 조선식산주식회사 이사		조선승업협회 감사 철도운수 위원 함경승업조합장
49	카지타 梶田喜代八		함흥극장 주식회사 이사 梶田組 토목건축 중역		
50	김수근 金秀根				함흥금융조합장 함흥수리조합장
51	시오카와 鹽川濟吉		경춘철도 창립, 전무	조선총독부 이재과	
52	히야마 檜山梅喜			조선총독부 재무국 이재과	
53	花岡鶴松		군산상공회의소 회두 군산작업주식회사 사장 花岡상점		학교조합의원 군산거류민단 의원

[표 19] 각 지역 취인소 주요 인물 (1)

	이름	지역/직위	민족	생년	학력	실업계-미곡, 토지 관련	실업계-은행, 보험, 증권 등
1	하마사키 기사부로 濱崎喜三郎	부산 이사장	日			○	
2	무라카미 나오스케 村上直助	대구 회장	日			○	
3	우치다니 만페이 内谷萬平	목포 상무위원	日			○	
4	이종섭 李鐘燮	군산 이사	朝			○	
5	카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郎	진남포	日	1881		○	
6	이타니 기사부로 井谷義三郎	부산 이사장	日	1876		부산곡물상조합장 부산정미업조합장 선미협회 간사 부산미곡증권신탁주식회사 이사 소화토지건물주식회사 이사	경남은행 감사역
7	고지마 세이스케 五島誠助	부산 상무이사	日	1887		부산곡물상 부조합장 부산곡물수이출동업 조합장 부산미곡증권신탁회사 이사 소화토지건물주식회사장 부산정미소합명회사 중역, 대주주	남조선신탁주식회사 감사역
8	타나하시 소지로 棚橋惣治郎	부산 이사	日	1885		부산곡물상조합 평의원	
9	이시가와 칸이치 石川侃一	부산 이사	日	1870		합명회사 石川정미소대표 부산곡물신탁주식회사 이사 소화토지건물주식회사 감사역 부산곡물상조합 평의원	
10	토미요시 시게카즈 富吉繁一	부산 이사	日	1889		부산수이출곡물개량 평의원 부산곡물상조합 평의원	
11	정기두	부산	朝	1869			

	鄭箕斗	감사					
12	오오이케 겐지 大池源二	부산 거래원	日	1892		부산곡물상조합 평의원	
13	가메다 龜田捨治	부산 거래원	日	1881		부산곡물상조합 평의원 부산곡물신탁주식회사 이사 부산곡물이출동업 조합장 소화토지건물주식회사 이사 조선부동산주식회사 이사, 지배인	
14	아키모토 신이치 秋元眞一	부산 거래원	日	1892		부산곡물상조합 감사	
15	榊末吉	부산 거래원	日	1889		鹿兒島市 仲町 미곡상 兪玉상점 근무 정미업조합·수이출동업조합 역원 합자회사榊精米所 사장	
16	오인규 吳仁圭	부산 거래원	朝	1871		부산곡물상조합원	부산제2금융조합장
17	하시모토 橋本安治郎	부산 거래원	日	1887		부산곡물상조합원 진영정미소주식회사 이사 소화흥업주식회사 대표	
18	大谷勝造	부산 거래원	日	1885		大谷精米所	
19	코미야 小宮清治	부산 거래원	日	1887			
20	三木孝一	부산 거래원	日	1890		부산곡물상조합 평의원	
21	신수갑 辛壽甲	부산 거래원	朝	1900		부산곡물소매조합 감사역	
22	한익동 韓翼東	대구 부이사장	朝	1888	早稻田大 學 졸업	대구미곡법래소 부이사장	
23	타카다 高田眞豊	대구 이사장	日			대구곡물주식회사 대주주	
24	高木昌治	대구	日			대구곡물주식회사 이사	대구산업금융 주식회사 이사

		이사장				대구곡물신탁 주식회사 이사	
25	八幡八和太	대구 이사장	日				대구산업금융 주식회사 이사
26	야오 쇼쥬 八尾恭三	대구 이사장	日			대구곡물신탁 주식회사 이사	대구신탁 주식회사 이사 대구산업금융 주식회사 이사
27	사카모토 슌스케 坂本俊資	대구 이사장	日	1884			대구은행 취재역, 감사역
28	시마다 킨시로 島田金四郎	대구 이사장	日			미곡상 운영	
29	서상현 徐相鉉	대구 이사장	朝			대구곡물신탁 주식회사 감사 조선미곡시장 주식회사 대주주	조양무진 주식회사 상무이사 대구산업금융 주식회사 이사 경북무진 주식회사 이사
30	서상일 徐相日	대구 감사	朝	1889	보성전문 학교 법 과 졸업		
31	하마사키 濱崎利三郎	대구 감사	日			대구곡물주식회사 대주주, 중역	
32	松前義三	목포 상무위원	日	1897			목포금융조합 조합장
33	시미즈 킨시로 清水金四郎	목포 상무위원	日	1878			
34	후쿠다 아리조 福田有造	목포 상무위원	日	1892	동경 明 治學院 졸업	福田농사 주식회사 사장	
35	森酒井	목포 상무위원	日			목포미곡거래서 상무이사	
36	井上留吉	목포 상무위원	日			井上留상점 사장	
37	麻生作男	목포 상무위원	日	1869			

38	후지타 린페이 藤田林平	목포 상무위원	日			목포신탁 취체역 목포무진 주식회사 취체역, 전무 평양무진주식회사 취체역
39	오카무라 마타지로 岡村又次郎	목포 상무위원	日	1882		일본생명보험 주식회사 목포대리점 扶桑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목포대리점
40	모리타 센스케 守田千助	목포 상무위원	日			
41	마사키 正木惠一	군산 이사	日			조선미곡시장 주식회사 군산지부장 전라북도양곡주식회사 감사
42	이영신 李英信	진남포	朝			대평농사 주식회사 이사
43	新井新藏	진남포	日			新井상점 사장
44	노기원 魯起元	진남포	朝			加藤정미소 사원
45	스즈키 타네이치 鈴木種一	진남포	日	1874		진남포미곡거래소 중역
46	즈카노 塚野季三	진남포	日			
47	야마모토 山本浦次郎	진남포	日			
48	스에나가 末永淳	진남포	日			
49	柳原龜一	진남포	日	1886		진남포토지회사 취체역
50	바바 馬場嘉藏	진남포	日	1874		馬場정미소 운영
51	油谷保三	목포	日			
52	이타가키 板垣府尹	목포 상담역	日			
53	요시자키 다쓰미 吉崎達美	목포	日			

[표 20] 각 지역 취인소 주요 인물 (2)

	이름	실업계-무역, 운수 등	실업계-기타 상업	공직	공공사업 및 각종 협회
1	하마사키 키사부로 濱崎喜三郎	○	○		○
2	무라카미 나오스케 村上直助	○	○	○	○
3	우치다니 만페이 内谷萬平		○		
4	이종섭 李鐘燮		○	○	
5	카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郎				
6	이타니 기사부로 井谷義三郎	부산상업회의소 부회두, 특별평의원 부산상공회의소 특별의원 부산공동창고주식회사 이사	부산수산물주식회사 이사, 감사역 五百井長平상점 부산지점지배인 경남승입 주식회사 사장	부산부회 의원	부산변영회 회원
7	고지마 세이스케 五島誠助	부산상공회의소 상의원, 부회두 부산상업회의소 상의원 五島합자회사 대표	부산공작소주식회사 이사		
8	타나하시 소지로 棚橋惣治郎		주식회사산리상점 이사		
9	이시가와 칸이치 石川侃一	부산환미운송주식회사 사장 부산상업회의소 상의원, 평의원	관동산업주식회사 감사역		
10	토미요시 시게카즈 富吉繁一	부산상업회의소 평의원 부산상공회의소 평의원, 상의원	富吉商店합자회사 대표 경남승입주식회사 감사		
11	정기두 鄭箕斗	부산상공회의소 특별위원	廣信商會로 객주업 남선창고 주식회사 참여	함경도 북청 세무관 부산부협의회 협의원 부산부회 의원	학교 평의원
12	오오이케 겐지 大池源二	조선기선주식회사 이사 겸임 大池回漕店 사장	남조선자동차주식회사사장 원산수산물주식회사 사장 삼천포수산물합자회사 대표사원 조선아비산광업주식회사 대표		

13	가메다 亀田捨治	부산환미운송주식회사 이사 부산운송주식회사 이사	부산공동창고주식회사 감사역		
14	아키토 신이치 秋元眞一		산리상점 상무이사		
15	榊末吉	부산상공회의소 평의원			
16	오인규 吳仁圭		남선창고사장	부산부협의회 협의원	
17	하시모토 橋本安治郎	소화운송주식회사 감사원	남선소주주식회사 이사 경남산업주식회사 이사		
18	大谷勝造	五島합명회사			
19	코미야 小宮清治		福島상점 근무		
20	三木孝一				
21	신수갑 辛壽甲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부산부회 의원	영도공립보통학교학부형회 의원
22	한익동 韓翼東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	합자회사 丸一상회 사장	경상북도 도회의원 대구부회 의원	남선경제일보사 사장 매일신보 경북지부장
23	타카다 高田眞豊				
24	高木昌治	경북운송 사장	합자회사 高田상회 사장 大正상회 이사		
25	八幡八和太				
26	야오 쇼쥬 八尾恭三				
27	사카모토 슌스케 坂本俊資	대구 상공회의소 특별의원	松前상점 대구지점 근무 대구연초원매팔회사 사장	대구부협의회 의원	남조선자동차 주식회사 대구출 장소 경영 거류민회의원
28	시마다 킨시로 島田金四郎			대구부의회 의원	
29	서상현 徐相鉉				
30	서상일 徐相日				대구상공협회 설립 경상북도청년협회 설립

31	하마사키 濱崎利三郎				
32	松前義三	목포상공회의소 상의원	목포전등주식회사 취제역		
33	시미즈 킨시로 清水金四郎	목포상공회의소 특별의원	조선면화 주식회사 전무취제역	목포부회 의원	학교조합 의원
34	후쿠다 아리조 福田有造	福田회조부 대구상선 대리점 경영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목포식산회사 경영	목포부회 의원	목포신보 사장 광주일보 사장
35	森酒井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36	井上留吉				
37	麻生作男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장유양조업 개창	목포부회 의원 전라남도 수산회 평의원	조선수산회 의원 대일본국수회 전라남도 본부장 천청지명회 목포지부장
38	후지타 린페이 藤田林平				
39	오카무라 마타지로 岡村又次郎	목포상업회의소 평의원	화양주종수이입 도매상 목포인쇄주식회사 취제역 사장	목포부회 의원	
40	모리타 센스케 守田千助	목포해운 전무이사	조선승입 주식회사 이사 태평주조 주식회사 이사 목포소주판매회사 사장 守田상점 사장 전남비료 사장		
41	마사키 正木惠一	군산조선철공 주식회사 감사			
42	이영신 李英信		삼익사 사원		
43	新井新藏	진남포기선 사원 진남포창고 이사	진남포전기 주식회사 이사 진남포물산시장 주식회사 이사 조선평안철도 대주주		
44	노기원 魯起元	진남포창고 감사 진남포무진 주식회사 감사			
45	스즈키 타네이치 鈴木種一	진남포창고 주식회사 중역 河野진남포지점	진남포전기 주식회사 설중역	진남포부협의회의원 진남포부회 부회장	진남포거류민단 의원 학교조합원

		진남포상공회의소 의원, 회장		전라도회 의원	진남포연초판매조합장 진남포송함석유판매조합장 진남포수입상조합장
46	츠카노 塚野季三		진남포축산 주식회사 감사		
47	야마모토 山本浦次郎	목포조 상담역	진남포물산시장 주식회사 대주 주, 중역 진남포물산 주식회사 이사		
48	스에나가 末永淳		진남포수산 주식회사 감사		
49	柳原龜一	진남포상공회의소 의원	진남포수산회사 취체역 진남포축산회사 취체역 사장		
50	바바 馬場嘉藏	진남포상공회의소 의원	연연초판매업 연초제조업		
51	油谷保三	목포상공회의소 서기장, 이사		목포부	
52	이타가키 板垣府尹			목포부 부윤	
53	요시자키 다쓰미 吉崎達美			목포부 서장	

[표 21] 각 지역 취인소 주요 인물 (3)

54	김상섭 金商燮	목포 부회장	朝
55	岡部駿策	대구 상임이사	日
56	蓄田豊次郎	대구 감사	日
57	辻邦米	대구 감사	日
58	松井色次郎	목포 상무위원	日
59	김성진	목포 상무위원	朝
60	宮崎憲之	목포 상무위원	日
61	内谷萬年	목포 상무위원	日

62	김원희 金源喜	목포 상무위원	朝
63	전용진 全容鎭	목포 상무위원	朝
64	具宗泰	목포 상무위원	朝
65	清水金次郎	목포 상무위원	日
66	平屋通信	목포 상무위원	日
67	福口由太郎	목포 상무위원	日
68	馬野 도지사	목포 고문	日
69	이영진 李泳鎭	진남포	朝
70	안호 安浩	진남포	朝
71	김경 金穎	진남포	朝
72	유양식 柳良植	진남포	朝
73	笠厚文太郎	진남포	日
74	野口彌一	진남포	日
75	鄭 산업과장	목포 고문	
76	령기 내무주임	목포 간사	
77	통정 교물 이사장	목포	
78	목진 신문사장	목포	

Abstract

A Study on Movement Against
Export Ban of Korean Rice to
Japan Force in 1920–30

Baik, Jooyo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actors of the Movement Against Export Ban of Korean Rice to Japan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20s and 30s. As about 80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Chosun was farmers, an analysis of agricultural policies is essential in determin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Also, since the ultimate goal of agricultural policy was to provide stable and cheap rice to the mainland of Japan,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shipment of Korean rice.

Especially, capturing the voices of actors of the movement and to getting away from metaphysical logic by the disclosure of actual,

specific individuals broaden the comprehension of Japanese times and provide one step closer to the reality.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seven major groups organized or actively involved in the name of the movement, most of the individuals were Japanese living in Korea, and the others identified as small percentage of Koreans who collaborated with Japanese empire. Also, as a rice issue, there were many landlords, rice industrialists and members of government groups.

In this study,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ovement was attempted using external perspectives, as well as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what the movement force had said. The analysis was made in a number of news articles featuring Chosun farmers, who were direct producers. From the Chosun farmers' point of view, the alternatives of the movement force were not effective for the farmers unless they change Korean rice shipment(or restricting the shipment) process. This problem was due to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ordinary independent Chosun farmers and Chosun peasants in the movements.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hly shipment of rice or rice storage by the movement forces as an alternative to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ies were actually policies that would have alienated the real lives of the Chosun farmers, but beneficial only to large landowners or rice dealers(mostly Japanese living in Korean peninsula). As a citizen of the Japanese empire, they used the political logic of imperialism to effectively block the economic policies of their home country. Therefore, it is easy to grasp that they were the agents of the political field rather than the economy. However, their basic nature was to protect their interests at all costs.

keywords : Movement Against Export Ban of Korean Rice to Japan,
Japanese communities in Korea, Exportation of Korean Rice to Japan,
Actor Analysis, Rice Exportation, Rice Exploitation

Student Number : 2015-20122